

# 70

## 우크라이나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제질서 재편과 군사 그리고 경제안보

2022. 6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2-2 (No. 7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집필자 소속기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 본 자료집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제70차 통일전략포럼의 발표문 및 토론문을 수록한 것임.

제70차  
통일전략포럼

2022-2 (No. 70)



# 우크라이나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제질서 재편과 군사 그리고 경제안보

2022년 6월 8일(수) 14:00-17:00

본 행사는 웨비나(ZOOM)으로 진행됩니다.

## 제1세션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14:00-15:20

●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발표 1** 우크라이나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동아시아 정치 · 안보 · 경제에의  
중층적 파급효과

김흥규 소장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표 2**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웅현 초빙연구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토론

1. 박원곤 교수 (이화여대 북한학과)
2. 이양구 상임대표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前 우크라이나 대사)
3. 이상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제2세션 우크라이나전쟁이 촉발한 안보 개념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5:20-16:40

●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발표 1**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군비경쟁 심화와 신기술 안보 위협

두진호 선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2** 신정부의 경제안보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

이승주 교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토론

1. 박영준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2. 김호홍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3. 조진구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6:40-17:00 **종합토론**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신청(온라인) <https://forms.gle/TK1tjTsZkStDon1z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http://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

## 목차

### | 제1세션 |

####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한국의 선택은?

김홍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3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용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11

【토론】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33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 45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57

---

---

| 제2세션 |

**우크라이나전쟁이 촉발한 안보 개념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표】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군비경쟁 심화와 신기술 안보 위협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65

신정부의 경제안보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87

【토론】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101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105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1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간 도서 목록 / 129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133

회원가입 안내 / 149

---







**제1세션**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한국의 선택은?**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웅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토론**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1세션 - 발표 ①

##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한국의 선택은?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경남대 통일전략포럼 세미나

##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한국의 선택은?



김흥규(金興圭)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2022. 6. 8

## I. 세계는 지금?

### ○ 미국의 양대진영론:

- 미국의 대중정책 진화: 대립-포용-협력-경쟁-충돌(?)
- 민주주의 세력 vs. 권위주의 세력의 대결

### ○ 중국은 천하 3분론적인 관점

- 미국 중심의 세계(미국의 60여개 동맹과 우호국) vs. 중국 중심의 세계(중국과 제1위역급인 120여개국) + 자율성 추구하는 서유럽 강대국들의 3각구도(1960년대 중공제대론과 흡사) 상정
- 중국은 세계질서(미국과 신냉전), 국제질서(UN 중심), Global질서(신종안보)로 구분: 세계질서는 극복의 대상, 국제질서는 존중 속에 개혁, Global 질서는 협력 속 주도노력으로 설정

### ☆ 유교적안보(신냉전)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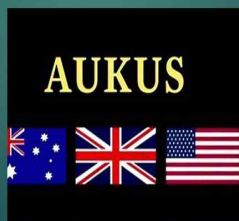
### ○ 러시아는 세계 4대영향권 추진

- 미국-중국-러시아-서유럽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전통 지정학 정치 부활
- 중력 vs 서구?
- 중국의 대 러시아 거리두기

### ☆ 향후 세계질서?

- 중-러관계, 미-중관계, 러-서유럽/미-서유럽 국가들간의 관계가 다 변수
- 미·중 등의 국내정치 변수도 주목해야 함
- 신냉전? 위협과 복잡적 다극화? G-Zero(존슨)시대의 도래?

## 미중 전략경쟁의 공간: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 미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

#### 파이브 아이즈 + 확대 추진

|  |      |  |    |
|--|------|--|----|
|  | 미국   |  | 한국 |
|  | 영국   |  | 일본 |
|  | 캐나다  |  | 인도 |
|  | 호주   |  | 독일 |
|  | 뉴질랜드 |  |    |

연합뉴스

장성규 기자 2021090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N1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We envision an Indo-Pacific that is open, connected, prosperous, resilient, and secure—and we are ready to work together with each of you to achieve it.  
President Joe Biden East Asia Summit (October 27, 2021)

- 2022. 2. 백악관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기존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영향권 확대를 저지하려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
  - 대중 경쟁을 장기적으로 인식하고, 동맹 및 우호국들과 함께 대중 압력을 더 강화. 미중 경쟁이 경제를 넘어 시도 더 첨예해 질 전망임
  - 디지털 경제(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signed by Singapore, New Zealand, and Chile in 2020 중진), 인프라(Build Back Better World" (B3W) initiative), 공급망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
  - 전략 산업영역, 즉, 우주, 사이버공간,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와 중국 고립을 추진
-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의 이산나 인지 없음을 중국 측에 이미 통보(2021.3). 장기적인 경쟁 상태.
  - 대립, 경쟁, 협력이 공존. 단 경쟁이 우선.
  -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 갈등조치는 불가능 인식⇒미 국내도 반발 큼. 대신, 재등조화 주장
  - 현재는 주후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과 대결을 위한 역량의 축적기!
-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중의 전략적 3각관계 직면
  - 적어도 러시아와 직접적, 전면적 군사 충돌은 배제
  - 서유럽 및 동맹의 단결과 협력을 이끌어내려 노력

## 바이든 행정부의 양 날개 중국 포위 전략: IP+PEF+TTC

- 인도-태평양 전략: 민주 vs. 권위주의 대립, 가치 동맹 추구.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PEF)는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경제협력체
  - 목적: 인도태평양 내 중국 영향력 견제,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체제 강화
  - 방식: FTA 권한을 갱신 않은 바이든은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 형태로 추진
  - 분야: 공급망,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노동 등(단, 시장개방(MA) 분야 불포함)
- 美-EU 무역기술이사회(TTC)는 트럼프 시기 갈등을 뒤로 하고, 대서양 양안관계 강화를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체
  - 목적: 무역 및 경제관계 심화 발전하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견제 목적 포함
  - 방식: FTA 보다 구속력 약한 국가간 약속(?) - 분야: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노동, 비시장국가의 불합리한 관행 대처 등
  - 특징: 최근 만들어진 2차 회의를 보면, TTC는 러시아 제재 협력 위주로 재편

· Trans-Pacific Partnership(이제 지역 12개국 디지털 FTA)  
· 반면, IPEF는 관세인자 등 시장개방(MA)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유인 기제가 부족하다는 평가

##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 파장

### ○ 서방 진영의 결속과 미국의 고만 가중과 리더십 약화

- 독일은 물론 서구 국가들의 대러시아 연합 강화, 독일의 재무장 강화
- 세계 주요국들의 군비경쟁, 특히, 일본의 재무장 강화
- 미국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불랑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 고민
- 전략적으로 미국은 대러/대중 유화정책의 선택을 놓고 고민 커질 것임
-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QUAD는 인도의 독자노선 채택으로 실효성 크게 약화
- 대중국 활동조약도 실행 어려움 ⇒ 폰트스런 대중국 활동조약인 미 정부의 리더십 약화
- 미국은 대안으로 Aukus +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시 **한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
- 미국 포함한 서구 사회가 유가상승 및 경제적 압박 등에 어느 정도의 내구성 가질지가 관련

### ○ 중국은 대러 전면적 전략협작(協作)에서 보다 신중한 중립적 자세로

- 중국은 군사행동만 제인한 대러 준동맹 상황
- 미중 전략경쟁에서 대러 협력은 필수라 생각
- 단, 서구의 결속과 미국의 단호한 대러 경제제재, 러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새로운 변수로 등장
- 중국의 대외전략 구상에 차질, 중국 내부의 논쟁과 고민 가중으로 대러 지원은 보다 신중한 태도로 변함
- 대대만 군사적 통일 시도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이 구상하는 민주 vs. 권위주의 혹은 **미사방** vs. **중러북** 대결 구도도 구현되기 어려울 전망.

### ○ 전쟁 장기화와 다국화된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로

- Win-Win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미-러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의 궤도로
- 세계 제3차 대전의 조짐? 대립적 관계 및 군비경쟁의 강화
-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새로운 국제정치 이합집산의 촉발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IMF Staff Statement on the Economic Impact of War in Ukraine

▶ IMF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지정학적 질서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3가지라고 지적[출처: <https://kr.thepoachtimes.com>]

- 첫째는 식료품·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소득과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둘째는 교역과 공급망 붕괴에 대규모 난민 사태까지 겹친 **주변국들의 경제가 전혀 없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셋째는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의 자신감 하락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증가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이 경색되면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미국 금융·에너지·외교로 귀결됨

- 데이비드 칼팩스 세계은행(WB) 중재는 3월 14일 워싱턴포스트(WP)가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 자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
- 3월 7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반(反)달러 축, 러시아·중국의 미국 경제력 탈피 계획(The Anti-Dollar Axis: Russia and China's Plans to Evade U.S. Economic Power)'를 게재, 브릭스 결제시스템의 구축
- 서유럽과 미국의 단합이 관련

## 우크라이나 사태의 동아시아 영향과 교훈

### ○ 교훈

- 동아시아의 파쇄지대(Shattered Zone)으로서 대만과 한반도 주목
- 동맹의 필요성. 단, 스스로를 방어할 군사역량 구비는 필수.
- 미국의 리더십과 Commitment 신뢰성 약화
- 미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양면 전선에 직면
- 국론 통일과 정치 리더십의 중요성
- 핵무기의 실제 전쟁 사용 가능성을 염려(러시아의 전술핵 상용 가능성 커짐).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

### ○ 미중간 대만해협 군사충돌의 가능성 악화

- 본래 시진핑 집권시기 이내, 양안 통일 추진 계획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일단은 이러한 계획의 연기 불가피.
- ※ 일대일로 추진으로 인한 세계적인 투지금에 대한 미국의 전면 동결 우려 → New Anti-Corruption Policy
- ※ 서방의 단결
- ※ 확전의 우려

### ○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단기적으로는 도발 중대 가능성

- 북한의 밀착, 북한의 유용성 증대
- 중국의 이해는 한국과 오이커 유사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은?)
- 북한은 핵 역량 증대 추진. 조만간 핵실험 가능성 대대.

##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 엄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가 악화 가능성 → 파쇄지대화

### ○ 세계 최대 군비 경쟁 지역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은 세계 제1, 2, 3, 5, 6위의 군사강국. 북한은 핵보유
- 북한 핵보유 수량은 현재 20~60개 추정, 2027년까지 100여개 보유 추정
- 미국의 역대 추가적인(급속한) 리더십 상실 우려

### ○ 세계 최대 경제강국 경쟁 지역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는 세계 제1, 2, 3, 10, 11위의 경제 강국

### ○ 영토분쟁이 조밀하게 얽혀있는 지역

- 일러 간 쿠빌 영토분쟁 포함 북방 영토분쟁
- 한일 간 독도/다케시마 분쟁
- 남북한 간 북방 한계선 분쟁
- 한중 간 이어도/쑤옌자오 분쟁
- 중일 간 센카쿠/다이오타오 분쟁
- 고지사 분쟁

### ○ 지정학적 단층선(지진대)이 통과: 대만해협과 한반도

### ○ 각국의 대응전략은 복잡미묘?

- 미국의 반중(反中) 전략경쟁, 충돌 불요. 동맹 강화와 경제탈중조치(한·태 경제프레임워크) + 대러 전선 강화
- 중국의 중국몽 실현 추진: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 강군몽, 기술굴기, 공동부유의 선진문명강국
- 일본의 안·태중심 전략과 군사적 역량 강화, 실리 추구.
-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 확보 노력, 중국과 전략연대 강화, 신통방정책 추진
- 북한은 자립과 자강 추진, 핵미사일 역량 확보



## 향후 5년 미중 관계 4가지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여파?)

|            |        | 안보                                                                                                                                                                                                         |                                                                                                                                                                               |
|------------|--------|------------------------------------------------------------------------------------------------------------------------------------------------------------------------------------------------------------|-------------------------------------------------------------------------------------------------------------------------------------------------------------------------------|
|            |        | 대립                                                                                                                                                                                                         | 협력                                                                                                                                                                            |
| 경제/<br>공공재 | 대<br>립 | <p><b>신냉전(A)</b></p> <p>- <b>트럼프 시기</b></p> <p>강한 미국/강한 중국<br/>체제안 이념의 대립</p> <p>전략/신기술 차등과 관련된 <b>탈중조치</b> 추진<br/>→ 인미동맹 강화, 중국과 우편반려</p> <p>남북한 충돌 방지 노력<br/>남북한 평화체제 추진 노향<br/>인국의 지계 안보적 약함 확보가 중요</p> | <p><b>전략적 협력속 경쟁(B)</b></p> <p>- <b>트럼프 이전 시기</b></p> <p>강한 미국/중국의 부상<br/>세계적인 상호이존의 세계<br/>→ 인미 상호 협력과 애중전략<br/>인국은 북한과 적국적 소용과 경제 협력 등<br/>평화기반 강화 노력</p>                   |
|            | 협<br>력 | <p><b>전략/경제속 제안된 협력(C)</b></p> <p>- <b>바이든 시기</b></p> <p>약화된 미국/미국아는 중국<br/>전략/신기술 차등과 부분적인 <b>탈중조치</b> 추진<br/>→ 인미 포괄적 동맹강화와 대중 적대 지계<br/>인국은 소극적 인미동맹외 모색이되고<br/>지계 안보적 약함을 확보하기 우선</p>                  | <p><b>미중 공진(共進) 혹은 혼진(D)</b></p> <p><b>미향?</b></p> <p>약화된 제안된 미국/강한 중국<br/>지속적인 <b>글로벌민생</b> 경제 침체, 예-자/식량위기 등으로<br/>미중 충돌의 여력부족<br/>→ <b>혼진</b> 인국은 생존을 위한 <b>전략적 추진</b></p> |

## 외교안보 정책 제안

## ○ 한국은 정체성에 입각한 대외전략 원칙을 수립할 것임

-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장, 양조, 폐쇄국으로 하여 세력권과 번외에 인간, 급격한 세력 변동 불발, 반영적 대외정책 실행
- 본토국가 → 청정지역 확보의지, 국외적 정책 추진
- 시장 통상주의 → 시장 확대에 대외적인 지원 행태, 규범을 일관한 국제질서
-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 자유, 민주, 인권을 가지면서, 단 한가지의 이해관계 이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는 것은 실패
- 중립비판국가 → 자란 확신은 핵심이익의 영역
- 중립국 교역 → 국제적 상황의 변화 만큼, 국제적 현대 추구, 새로운 국제질서 구성에 적극 참여, 자율성 확대에 수동적-이론적 사고 지양
- 새 시장과 경제의 정형화 시기 됨, 급격히 시장-통행-국제내부의 융합
- 우리들의 국외적 목표는 대단히빈곤의 상황, 통일, 번영이며, 반대로 이 통일, 번영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음

○ 親美-協日-聯西歐-和中-通俄-牽北 전략을 추진해야

- 미국으로부터 방위산업, 원유, 중금속, 그리고 보복을 환원, 보상을 위한 지원(보편적, 다자간), 중금속 연대, 적극적으로 추진
- 인민당을 표창하는 글로브 통영으로 전환, 인민 및 친인척(친척)은 영웅은 미국 중금속(친척)을 돌려 받기
- 중국군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존중, **악대(대군)를 진압은 자제해야**, 중국과 비친척, 양력, 비친척, 인보양력 등에서 소통과 협력 강화
- 특별이 안보 정세의 급변에 대비한 안보태세 강화
- 대북 관련 외교, 미중, 북중, 대외적 공존 전략 추진해야, 융성적 북중 양력 추진이 핵심
- 신중 안보(북중), 사이버, 환경, 기후통영 양력은 미중, 동맹 협력 기류성 모색

## ○ 새로운 국제질서 창도하는 핵심축 역할

- 세계 주요중견국가들과 연대하고, '공생' 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공헌해야 함
- 한국은 다자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핵심축(리치핀) 외교를 전개해야 함





감사합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웅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I.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목적

#### 1) 범러시아주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이며, 대부분 러시아인이며, 러시아와 형제국가라는 러시아인들의 주장이 있음.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스 인들을 “형제 국민”이라 부르며, 이는 이들 두 나라가 “모국” 러시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임.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작은 러시아(malaya rossiya)’라 불러 왔음.

이는 19세기의 ‘범슬라브주의’를 연상케 함. 제2차 침공과 동시에 푸틴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작전의 목적은 러시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돈바스의 국민보호에 있다고 천명. 침공의 정서적 토대는 범슬라브주의의 부활로 보이지만, 그 외양은 전형적인 히틀러의 동유럽 팽창의 모습(1938년의 Anschluss, Sudetenland 병합 등)을 띠고 있음.

2014년 제1차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돈바스와 루한스크 독립 지지(novorossiia 건설) 및 크림공화국 합병의 과정에서 제2차 침공은 예견되어 왔음.

## 2) 소비에트로의 회귀: 유라시아연방의 건설

1992년 ‘타시켄트 조약’으로 CIS 국가들이 ‘집단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2002년 푸틴은 이를 확대 개편하여 집단안전보장조약기구(CSTO)를 형성했음. 기존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가 가세했고, 2006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 이는 mini-Warsaw Pact라 할 만한 것이었음.

2011년부터 푸틴은 기존의 관세동맹국인 벨로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연방’의 창설을 주장해 왔음. 이와 같은 semi-Soviet 건설 구상은 1991년 CIS의 형성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것임. 푸틴 자신은 이것이 USSR의 부활이 아니라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아이디어는 1994년 Aleksandr Dugin의 ‘보수주의 혁명’, Igor Panarin의 2009년 ‘유라시아연방’ 구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두건의 구상이 파나린의 구상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 즉 중, 동부 유럽을 포함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양자의 아이디어의 공통점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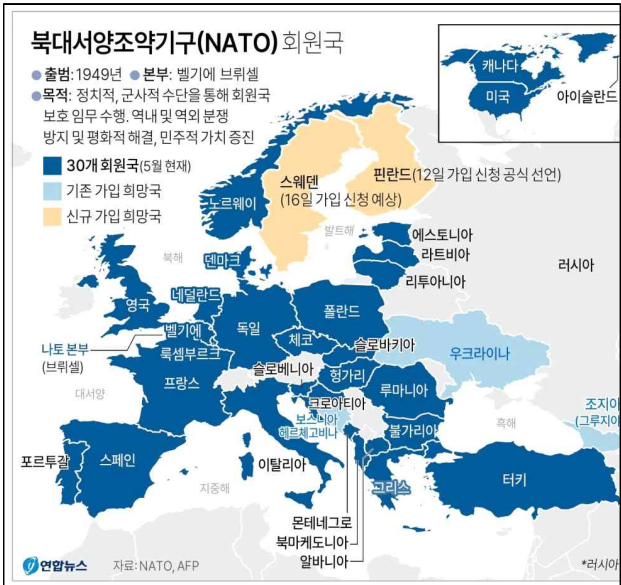
## 3) 안보위협: NATO의 팽창

냉전 해체 이후에 NATO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및 구 소련의 공화국들은 1999년 3월 체코, 폴란드, 헝가리, 2004년 3월 발트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9년 4월 알바니아 등임.

2008년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NATO 가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거부된 바 있음.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면 핀란드와 벨로루스를 제외

한 러시아의 유럽 쪽 접경국가 모두가 대 러시아 군사동맹을 형성하는 셈. (2022년 2월 러시아의 제2차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 핀란드와 스웨덴은 5월 NATO 가입의사 표명.)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접근과 NATO 가입을 별개로 사고해 왔음. 2002년 이른바 ‘로마선언’을 통해서 푸틴과 NATO 가맹국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와 협력안보의 원칙하에 유럽-대서양 지역의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의 창출에 동의한 바 있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체첸과 다게스탄의 이슬람 테러리즘에 직면한 러시아는 이에 적극 가담했음. 러시아는 이를 위해 조직된 NRC(NATO-Russia Council)에 참여했고, 우크라이나의 EU 접근에는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결국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NRC는 중단되었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을 견제해 왔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침공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임. 그렇다고 이 세 가지의 총합이 침공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해 준다고 할 수도 없음. 그러나 요약하자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이러한 배경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 따라 러시아의 침공 목적을 가늠하면,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중립화(괴뢰국가 성립), 나아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Novorossiya 완충지대 설정, 우크라이나의 합병까지 범위에 넣은 것으로 보이며, 금번의 침공은 러시아의 ‘제2차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라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II. 전쟁의 전개와 양상

침공 초기의 군사작전 전개 과정을 보면, 러시아는 제2차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면서 전쟁의 ‘정치적 목적’ 심지어 명확한 군사적 목표를 설정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음.

### 1) 개전 시의 작전과 교착

초기 러시아군의 작전 양상(키이우 공략을 위한 벨로루스 경유 북부 진공, 키이우 공략을 위한 러-우 국경 통과 북동부 진공, 하리키우 방면 동부 진공, 오데사와 마리우폴 점령을 위한 남부 진공 작전 등)으로 보면 러시아의 목적은 (최소) 우크라이나 포위를 통한 젤렌스키 정권의 교체 압박에서 (최대)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배였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군사작전의 최종적 목적은 분명하지 않음. (실제로 제1차 침공에서 러시아는 작전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크림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의 대응과 유럽의

대응을 보며 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cf. Michael Kofman, et. al., Lessons from Russia's Operation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7.)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작전 변경이 4월 7일 단행되었음. 즉 북부 진공을 담당한 동부군관구 병력을 철수하고, 동남부 지역의 병력으로 통합, 단일 지휘체계(알렉산드르 드보리니코프) 하로 편입시킴. 이는 북부 진공작전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부딪치며 교착상태에 빠지면 서 진공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보급, 병참로의 다기 화가 러시아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줌.

더욱이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하자 4월 27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음을 표명했음. 개전 2개월이 지나면서 전황의 지지부진함과 서방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전선확대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 일 수도 있으나, 3월 초부터 일부에서 제기된 푸틴의 (정신) 건강이상설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됨. (1956년 10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각각 이집트를 침공한 수에즈 위기 당시 흐루쇼프는 이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으며, 1992년 NATO의 세르비아 공습 당시 엘친은 ‘미국은 러시아가 핵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양’이라며 위협한 적이 있음. 러시아로서는 푸틴의 언급이 세 번째 핵 공갈인 셈임.)

\* 푸틴의 건강이상설이 증폭되면서, 푸틴의 사망 또는 러시아 내의 쿠데타 발생 등이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운위되고 있음(이른바 death-watch theory). 내부적인 정권 변화 내지 정변의 발생으로 전쟁 정책이 변화한 역사적 사례를 러시아의 경우에 국한하여 보면, 이러한 ‘희망’을 실현할 경험적 근거는 희박함. (1855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사망하면서 영국, 프랑스, 터키가 러시

아와 교전하고 있던 크림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기대가 서방 국가들 내에서 고조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1년이 더 지난 1856년이었음. 1918년 볼셰비키 정권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철수를 결정했지만, 연합군의 개입과 내전의 격화로 1922년까지 살육전이 전개되었음.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과 소련의 정권변화로 간접 개입하고 있던 한국전쟁의 종결이 예상되었지만, 전쟁은 4개월 이상 진행되었음.)

요컨대 러시아 내부의 권력구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의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정권 변동이 전쟁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관측할 수는 없음.

## 2) 러시아의 계산착오

### 1. 우크라이나의 군비증강:

우크라이나는 제1차 피침 이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음. 병력의 단순비교 만으로도 상비군의 숫자가 1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상군의 전투차량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를 (대전차포와 지대지미사일 등을 새로 도입하는 등) 신형으로 바꾸었음. 2만 명의 공수부대와 1천 명의 특수부대를 신설했음.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 러시아 전차 파괴 및 러시아 지휘관 저격살해에 새로 도입한 대전차포와 신설 특수부대가 기여한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보급-병참의 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열세일 수밖에 없음.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유럽 전선에서의 난제였음. 따라서 현지 약탈과 민간인 살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제1차 침공에 대한 서방의 미온적 대응의 기억도 오판의 한 원인이 되었음. 제2차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세계 각국의 도덕적 지원은 예측 이상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큼. 물론 가장 커다



란 오판은 젤렌스키 정부의 대러 항전의 의지임.

## 2. 러시아 군부의 전면전 경험 부재:

러시아 군부 역시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러시아군은 1979~1989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침공 작전을 경험한 적이 없음. 체첸 전쟁 이후 제1차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 내전 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은 해당 국가 내의 친러 무장 세력 내지 정부군의 대응이 있었음. 요컨대 러시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셈임. “장군들은 항상 마지막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한다”는 처칠의 경구를 떠올리게 함. 침공 초기의 병력 배치와 재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3) 협상의 가능성 여하

개전 직후부터 협상의 타진은 여러 직, 간접 관련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협상회담도 몇 차례 열렸음.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의 의지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측이 강한 것으로 보임.

### 1. 협상의 과정

개전 직후인 2월 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철수, 러시아의 재침공 시 서방의 군사적 지원과 동맹의 보장,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의사 포기를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함.

3월 초의 협상에 양측은 피난민 소개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의 개방에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크림합병의 승인,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의 독립 인정, 우크라이나의 ‘무장해제’와 ‘탈나치화’ 등을 요구하면서 교착.

같은 3월 초, 양국 외상의 ‘정진’ 협상 실패. 마리우폴에 대한 공습

중지를 우크라이나가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거부.

3월 말,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및 NATO 가입 포기에 관한 협상, 실패.

4월 오스트리아 총리 네함메르,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가 푸틴과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푸틴은 협상의 의도가 없음을 천명.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 및 ‘정전’ 또는 ‘중전’은 현재의 상황에서 무망한 것으로 보임. 결국 전쟁은 단기전의 단계를 넘어 장기화하는 것으로 보임.

정전(또는 중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① 양국 전쟁 목적의 달성 여부, ② 전쟁에 대한 피로감(양국 내 반전 여론 및 전쟁수행능력의 고갈)의 여하, ③ 적절한 중재자(또는 중재국)의 존재가 필요할 것임.

① 양국 전쟁 목적의 달성 여부: 러시아의 침공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달성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군의 작전 상황으로 판단하면, Novorossiya가 주장하는 영역(최소한 돈바스 지역, 마리우폴, 크림반도, 헤르손까지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을 완전 장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보임. 나아가 러시아 해군이 오데사 봉쇄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령지역은 확대될 수도 있음. 러시아의 작전 목표가 위와 같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탈환을 목표로 하는 한 협상은 난망함.



② 전쟁에 대한 피로감 여하: 러시아군은 작전 초기의 실책과 병사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전장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이런 경우 상징적으로 ‘작은 승리’를 위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오데사 쪽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음.

러시아는 국내의 경제적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있음. 2014년 이후 서방의 제재는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루블화의 위기도 극복했음. 적어도 러시아 국내적으로는 전쟁 이전의 경제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러시아인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이 연장선 상에서 국내의 잠재적 반전 목소리를 러시아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러시아는 국내의 전장에서 아직까지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셈임.

\*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쟁 당사국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세계의 경제의 교란과 피해화가 ‘상호의존’ 시대의 전쟁 장기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지만, 1909~1910년 출간된 Norman Angell의 저서가 대전의 발발과 전쟁의 장기화에 관해 정확한 전망에 실패한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음.

③ 적절한 중재자(또는 중재국)의 존재: 3월 20일 튀르키예의 외상 메블뤼트 카부소글루가 ‘정직한 중재자’를 자임하며 중재에 나선 바 있지만, 진전은 없었음. (1878년 Congress of Berlin에서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직한 중재자’를 자임하며 근동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러시아로부터 흑해 동부의 영토를 튀르키예(오스만제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러시아의 반감을 산 적이 있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한 중재자들 모두 친서방적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2. 장기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전쟁 목적 자체가 부분적으로라도 달성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협상 시작 요건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가 될 수도 있지만, 2019년 헌법 개정으로 NATO 가입을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으로서는 서방의 지원이 끊기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2차 침공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탈환을 요구할 것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전선은 확대되어 가고 있음. 정치적 전선도 확대일로에 있음. 스웨덴과 핀란드 등이 NATO 가입을 희망한다고 표명했으며, 덴마크는 유럽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정책으로 표방했음. 교전 당사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지만, 침공이 촉발한 이해관계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셈임. 특히 영국과 폴란드, 그리고 발트3국은 1939년 독-소 개전 직전의 경험을 공유,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전선이 확대되면 관여 국가의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황이 한 쪽의 승패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지면서 전쟁 당사국과 주변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정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III. 전쟁 이후 유럽 국제질서의 변화

전후의 질서는 전쟁의 단기 종료 또는 장기화의 여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전쟁의 장, 단기화와 상관없이 20세기 후반 이후 일반적으로 전쟁 이후에 형성될 수 있는 국제질서(체제)로 이론가들이 상정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임.

즉 전후의 국제질서 변화는 이론화된 역사적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정치의 이론적 지혜는 힘의 분포에 관한 한 ① 단극 체제, ② 양극 체제, ③ 다극 체제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힘의 분포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법과 그에 따라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역시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일반적인 도식화에 의존한다면…

적어도 유럽의 국제질서 변화에 관한 한 양극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데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음. 현실적으로 다른 두 개의 국제체제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양극 체제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에 등장한 ‘냉전 체제’로서의 양극화와는 다른 것이 될 것으로 보임. (냉전체제와 양극체제를 등치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양극화가 냉전을 수반한 것이 역사적 경험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 1) 군사적 양극화

현재 NATO의 팽창,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다만 NATO가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CSTO가 이른바 러시아의 근외지역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으로 양 진영이 직접 대립할 가능성은 냉전 시대의 NATO와 WTO 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양 동맹체제의 실질적 규모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군사적 양극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봉쇄와 고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냉전 시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봉쇄와 단절에는 이르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1차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서방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긴장상태는 지속될 것임.

## 2) 정치적 양극화

EU와 ‘유라시아연방’의 경쟁체제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푸틴의 ‘유라시아연방’이 EU를 모델로 한 것이라면, 사실상 진영 내의 정치, 경제적 동맹체제의 강화와 EU에 대한 경쟁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유라시아연방’ 구성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특성상 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될 것임. 즉 냉전 시대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3) 신냉전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대립은 많은 식자들이 주장하는 ‘신냉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신냉전’이라는 용어처럼 모호하고 학문적, 정책적 실용성, 실효성 없는 용어도 없음. 이 용어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의 미소관계를 Fred Halliday가 “the second cold war”라고 표현한 이래 초강대국의 관계 악화를 표현하는 저널리즘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대립도 한때는 ‘신냉전의 전개’라고 표현되었으며,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2014년 제1차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면서 저널리스트들은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 용어로 표현했음.

그러나 ‘신’냉전이란 용어는 위 Halliday의 용법처럼 냉전의 대립 이후 짧은 데탕트 시기를 거쳐 다시 정치적, 군사적 대치가 형성되는 시기를 설명하는 용어임. 제1차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신냉전’ 상태가 되었다는 표현은 사용 가능하지만, 이미 유럽에서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침공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더욱이 ‘냉전’의 재래라고 표현하기에는 20세기의 냉전적 대치와 21세기 양 진영의 대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저널리즘의 용어로 시작되었지만 학문적 용어로 정착한 ‘냉전’은, 양 초강대국의 ① ‘군사적 대치’, ② ‘체제 우월성 경쟁’, 그리고 ③ ‘이데올로기 대립’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

20세기 냉전의 ① ‘군사적 대립’은 양 초강대국이 자국의 영향권을 공고히 하면서 상호간 군사적 개입을 불허 또는 자제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영향권 내의 국가가 타 영향권의 국가와 무력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적극 억제하는 정책이기도 했음. ② ‘체제 우월성 경쟁’은 제3세계라는 지역에서의 자국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 그리고 ③ ‘이념적 대립’은 역사의 필연성에 관한 주장의 대립이기도 했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개될 국제질서는 이러한 세 가지 냉전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음. 즉 군사적 대립은 어느 정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들이 경제체제의 우월성 경쟁을 할 만큼 체제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권위주의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대립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치환할 수 없음. 군사적 영역 이외의 양 진영의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요컨대 ‘신냉전’이든 ‘냉전’이든 이를 위한 요소들이 향후의 국제질서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4) ‘세계전쟁’인가, ‘러시아 봉쇄’인가?

냉전 시대는 초강대국 간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음. 현재 초강대국 사이의 직접적인 교전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지구상의 모든 초강대국과 강대국들이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soft world war는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이 명실상부한 세계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동맹국에 대한 맹목적 지원 및 지지(독일-오스트리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안전보장 약속의 방기(영국/프랑스-폴란드)라는 모순적인 정책의 균형점을 서방 국가들이 모색해야 할 것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전쟁 이후 유럽의 국제질서는 극단적인 양극 대립이 아니라 러시아의 팽창을 봉쇄하는 수준에서 대립과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굳이 양극체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면, 서방과 러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IV. 전후 동북아의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방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또는 종료 이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유럽의 국제질서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반드시 연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20세기 이후 국제관계사의 교훈이지만, 동북아시아에 지정학적인 commitment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유럽에서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를 중국이 지지하는 상황에서 두 대륙의 정치적 상황변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



라는 주장은 이론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

핵심적 논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동조하는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미치는 영향,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으며, 푸틴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언급으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threshold)이 낮아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동향, 그리고 이와 같은 대륙 동맹의 강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연대의 향방 등일 것임.

### **1) 상식적 추론: 중국의 존재감과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상식적인 추론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전념하고, 미국이 유럽의 전선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중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강화되는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러시아가 유럽의 전선에 깊숙이 발을 들이밀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것이며, 중국은 대미 관계에서 또 하나의 레버를 갖는 셈이 될 것임.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 시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지했으며,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직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덩샤오핑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자는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이미 중소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소련의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소련의 군사

개입을 비난했음.)

중국의 존재감이 짙어질수록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심화할 것이며, 경제적 침체를 중국의 원조에 기대하면서 핵 무장 완성으로 향하는 보폭도 빨라질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남북한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한국은 대북 관계에서 일정 부분 중국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가 감지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은 일견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일 수 있음. 제2차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많은 논자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한국의 새로운 보수정부 역시 이러한 외교노선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여기에 또 다시 한미동맹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뉴캐슬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이 될 것”임. (cf. Rene Albrecht-Carrie,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 2) 한국의 대응

### 1. Bipartisan Diplomacy (초당적 협력외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질수록 북한 핵을 포함한 남북한 문제의 해결에 한-중관계의 외교적 불균형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 한반도 문제에 관한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 북한 접근에 이전 정부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초당적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관한 한 국내 정치세력 사이의 winner-take-all system이 적용되어서는 곤란함.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더라도 지난 정부가 대북한 관계에서 이룩해 놓은 정치적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

음. 요컨대 야당을 대북한 관계에 활용하는 것은 보수정부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약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유능한 외교정책 결정자는 특정 정책에 있어서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이용해야 함. 요컨대 two level game에 능해야 함.(cf. Norman A. Graevner “A Bipartisan Foreign Policy,” Current History, 24/142, 1953.) (결국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1990년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 사회당 부위원장 다나베 마코토가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의 3당 선언(조선로동당, 자유민주당, 사회당)을 통해 북-일 수교 교섭을 시도한 바 있음. 1980년대 일본 사회당의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야당외교’는 일종의 bipartisan division of labour라 할 수 있음.)

(반공의 선봉에 서면서 정치적 입신출세에 성공한 리처드 닉슨은 대선에 당선된 후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1972년 베이징을 방문함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음. 역시 반공주의자 로널드 레이건은 힘의 우위에 의한 대소련 관계개선에 성공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음.

남북한 관계의 현재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 정책이 더 이상 창의적인 것도, 충격적인 것도 아닌 상태임. 물론 보수정부의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실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spectacle effect는 거둘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북한의 화답 가능성,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남북한 관계 개선의 일정 부분은 야당의 몫으로 돌 필요도 있음.)

## 2. 군비확장 또는 핵무장론의 확산에 대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군사개혁 및 방위정책의 재검토(특히 재래식 병력)에 나

설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음.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발사체계의 다양화 시도로 오히려 구성 각국은 핵(무장 또는 비무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큼.

오랜 기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온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기지국가’ 또는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 내지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경우 적어도 비핵3원칙의 부분 수정 또는 폐기에 관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임. (이미 지난 3월 초 일본의 자민당 일각에서 비핵3원칙의 수정에 관해 언급한 바 있음.) 소위 ‘평화헌법’의 개정은 지난한 일이지만, 정책으로서의 ‘원칙’의 수정은 빈번한 논의 제기만으로도 가속화할 수 있음. (현재와는 달리 다극체제로의 변화 속에서의 주장이긴 하지만, 1993년 케네스 월츠는 일본의 핵무장을 예측(주장)한 적이 있음. cf. K.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1993.)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사드의 추가배치에서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속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동맹의 일반론은 동맹국가로부터 버려질 가능성과 동맹국가의 분쟁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은 반비례의 경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 동맹의 강화나 약화는 포기와 연루의 위협 중 어느 하나를 줄여주는 동시에 다른 하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한미동맹의 공고화로 한국은 이와 같은 ‘동맹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동맹의 비용과 대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할 것임.

당분간은 동맹 강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 우세를 보일 것이지만, 동맹유지를 위한 비용의 증가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면, 핵우산 강화를 포함한 동맹 강화론은 여론과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음. 이 역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부분임.

요컨대 국내의 단순한 핵무장론의 출현에서부터 동북아 지역의 나

선형 핵 군비경쟁 격화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3. 한국의 외교원칙은 무엇인가?

국제질서의 모습 여하, 동맹체제의 존재 여하와 무관하게 국가는 대외정책과 자세에 있어서 원칙을 수립하고 견지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가의 일관성과 대외적인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그 원칙은 지속성 있는 성명일수도 있고, 국가 간 또는 지역 내의 합의 내지 조약일 수도 있음.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준칙과 선언도 국가의 외교정책 원칙이나 기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비군사적 물자의 (미국, 캐나다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한-러 관계를 고려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관계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임. 즉 느슨한 양극적 대치 상황에서는 인도주의적 원칙보다는 강대국과의 관계 악화나 동맹의 악화 가능성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음.

한국은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연임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중견국가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주요한 국제 분쟁에서 유엔의 기본정신이나 ‘인권선언’, ‘(현장 제 51조의) 집단안전보장원칙’ 등을 외교정책과 행동의 명분으로 천명한 경우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음.

외교적인 행위에서 특정 동맹에의 편중을 피하고, 강대국의 압박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의 표방일 것임. 동맹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사회의 준칙을 인용, 대응태세를 취하면서 보편적 국

제기구의 존재이유를 강조하는 것은 중견국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수교 당시의 성명문, 그 이후 체결된 각종 조약을 검토하고 지원 혹은 반대의 명분을 찾아야 할 것임. 때로는 명분의 모색이라는 지루한 지적 과정이 국가의 국제적 위치를 격상하는 사다리가 될 수도 있음.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음.)

## ②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은 수많은 지적, 실천적 원칙을 가지고 있음. 기본합의서 이후 6.15공동선언, 9.19합의 등 다수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 물론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다른 국가의 군주에게 성실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약이 국가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기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음. 그러나 위의 문서와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실제로 지킨다고 해서 국가이익에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 북한 관계에 있어서 변하지 않을 외교원칙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선언과 합의의 파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레드라인을 설정, 공표할 필요가 있음. 레드라인의 입안과 설정, 공표 그리고 실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실천의 디테일 수립이야말로 안보정책의 책임이 있는 정책결정자와 어드바이저들이 해야 할 일임. (1941년 일본의 동남아시아 팽창에 대해 미국은 이른바 Hull Note를 발표하며 일본에게 1937년 이전의 국경 즉 중국 침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적이 있음. 이는 미국이 상정한 일본 안전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즉 레드라인이었음.)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공허한)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수사의 반복은 외교적 유능함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안보적 무능함의 노출임.

### ③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군비경쟁의 격화와 동맹체제의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 특히 경제관계의 악화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일 것임. 스스로 균형 있는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식자들이 ‘안미경중’을 주장하고 있지만,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동북아시아의 한국은 이를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서서히 전환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냉전의 극성기에 일본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표방하며 중국과의 교역을 비롯한 경제 교류에 성공했음.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극화는 이념적 냉전 대립의 색깔이 열기 때문에, 일본의 ‘정경분리’ 원칙만큼 동맹 이탈의 성격도 가시화하지 않을 것임.

한국의 대 일본, 대 미국 교역 비율이 압도적이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대 중국 교역의 비율이 압도적인 시대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임.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제품의 글로벌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도 확산 중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슬의 체계 속에서는 제품의 설계, 원자재와 부품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세계 각국의 긴밀한 협력과 분업에 의해서 이루어고 있음. 경제보복과 단절로 인한 타격은 initiator 역시 피할 수 없음.)

요컨대, 일련의 외교적 원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외교의 노선을 바꾸게 될 것이며,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 역시 저락할 것임.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경

힘적으로 원칙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원칙과 정책의 수립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국가의 일관성과 안정감 구축에 더 효과적일 것임.



제1세션 - 토론 ①

##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 우크라이나 전쟁 조명

□ 국제정치적 맥락, 지역적 의미, 전쟁에 대한 성격 등 삼중 접근이 필요함

### ▲ 국제정치적 맥락: 세계질서

□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의 시작인가?

○ 퍼거슨(Niall Ferguson)은 “한국에서의 전쟁이 냉전을 촉발했듯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신냉전의 기폭제”라고 주장함<sup>1)</sup>

○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쟁이 권위주의 對 자유주의 국가 간 갈등으로  
심화하는 양상이 특별히 표출되지는 않음

○ 냉전으로 치환하기에는 이념적 정향이 분명치 않고, 국가 간 이해

---

1) Niall Ferguson, “Putin Misunderstands History. So, Unfortunately, Does the U.S.,” Bloomberg, March 22, 2022,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2-03-22/niall-ferguson-putin-and-biden-misunderstand-history-in-ukraine-war>

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쟁을 대하는 행태가 다름

- 예를들어,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 간 밀착 정도도 여전히 공간이 남아 있음

- 중국이 전쟁 초기보다는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지만, 중국이 표방하는 대외원칙의 기본인 ‘비개입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정황은 포착됨
-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무한 협력을 공표하지만, 실제 경제 지원은 제한되고 군사 지원은 시행하지 않음
-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성공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여 “공존적 유라시아 지역질서 창출”이라는 목표로 단일 대오를 형성할지는 불확실함
- 성공한다면 미국 일극 체제를 종식하고 다극질서를 창출할 수 있지만, 중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상호불신과 경쟁, 오해 등으로 점철되어 공동의 적이 명확할 때만 ‘편의에 의한 결합’이 성사되는 관계 속성을 보여줌

○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 이해에 부합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증대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 공간으로의 전환이 지연 혹은 분산될 수 있음
- 키신저가 주창하는 중·러간 상호견제를 통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도 어려워짐

□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정치의 부활인가?

○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할 만한 충분한 국력을 확보하지 못함

- 러시아 GDP는 한국과 유사함(2020년 기준 러시아는 1조 4,834억 달러-세계 10위, 한국은 1조 6,382억 달러-세계 9위, IMF 통계)
- 군사비는 2021년 기준 러시아가 659억 달러로 세계 5위, 한국은 502억 달러로 세계 10위임(SIPRI 통계)
- PPT로 계산할 경우 실제 군사비는 3배로 증대된다는 주장도 있음<sup>2)</sup>
- 그러나, IMF 예측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력은 향후 5년간(2021~2026년) 대폭 하락함<sup>3)</sup>

○ 따라서 러시아가 미국 혹은 나토를 상대할 강대국으로서의 능력과 위치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급속도로 쇠락할 수 있음

- 유럽 국가의 대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 축소 노력이 지속될 것임
-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 견제 능력이 더 향상됨

---

2) Michael Kofman and Andrea Kendall-Taylor, "The Myth of Russian Decline," *Foreign Affairs*, Nov/Dec, 2021, p. 147.

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IMF가 추정한 것으로(2021년 2월) 전쟁 영향을 반영하면 경제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GDP 상승률은 2023년 이후 2% 미만으로 하락하고, PPT도 2021~2026년 기간 동안 사실상 증대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2/08/pr2136-russi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0-article-iv-consultation>.

- 강대국 간 상호이해 및 세력균형에 기반한 ‘강대국 정치’는 미중 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세력권 인정을 현재 미국과 서방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양상임
  - 강대국 중심의 지역 질서 기반으로 전개 여부는 중국과 미국의 역량과 의지(민주주의 복원과 사회적 합의 여부)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팽창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성향이 우크라이나전쟁에 표출됨<sup>4)</sup>

- 러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수정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RBIO 부인), 푸틴의 개인적 야심 등이 결합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여 주권국가를 굴복시켜 사실상 식민지화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적 양상이 나타남
  - 집권 전기 전략적 계산에 따른 실용적 접근을 선택했던 푸틴이 점차 러시아 보수주의와 대러시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함
  - 러시아의 군사전략도 ‘공세적 방어전략’으로 바뀜
  - 제국 구축을 위한 필요성 차원에서 천연자원, 식량, 인구 등이 풍부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
-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과 결과에 따라 강대국의 폭력 수단 활용 확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중국의 대대만 무력 사용 가능성 등이 회자됨

---

4) Fareed Zakaria, “Russia is the last multinational empire, fighting to keep its colonies,” *The Washington Post*, March 31, 2022.

## ▲ 지역적 의미

### □ 우크라이나 전쟁은 4중전쟁의 다층 구조임

#### 1) 러시아-서방 전쟁

- 나토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전쟁 원인으로 일부에서 제기함<sup>5)</sup>
- 침공 이후 미국, 나토, 한국, 일본 등이 반러 전선을 형성함

#### 2) 러시아·중국·북한 對 한국·미국·일본 대결 구도

-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가 양측 대결 구도를 강화함
-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재정 대리시아 혹은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팽창적 성격의 러시아가 나토 및 EU 가입을 통한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

#### 4) 돈바스 내전의 국제전화

-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내전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함

---

5) "John Mearsheimer on why the West is principally responsible for the Ukrainian crisis" *The Economist*, March 19, 2022.

## ▲ 전쟁의 성격

□ 정당한 전쟁론(Just War)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불법·부당한 전쟁

○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 중 핵심인 정당한 이유가 부재함

- 정당한 이유는 침략으로부터 방어, 침략으로 강탈된 영토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등임
- 전쟁의 목적은 팽창, 영광, 약탈, 말살 등이 아닌 불의와 공세에 대응하여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함
- 또한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모든 비폭력적 노력이 실패한 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음

○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당함

-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중 핵심적인 원칙은 민간인 공격 불가로서 비전투원과 일반 시민, 군 시설과 관련 없는 민간 시설 등이 공격의 직접 목표가 되서는 안 됨
- 수단의 비례성도 강조하여 재래식 공격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로 대응해서는 안됨
- 유엔 OHCHR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우크라이나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이 부상함
- 푸틴은 침공 4일 만에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표방함
- 러시아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백린탄과 소이탄 등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됨

## ■ 국제정치적 합의

### □ 1945년 구축된 유엔 체제에 대한 도전

- 유엔에 내재한 자유주의적 국제제도주의와 세력균형의 조합이 부정교합의 양태로 나타난 대표적 사례임
  - 이미 유엔 개혁의 필요성,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부여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불법 침공으로 강하게 제기됨
  - 유엔 총회를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도록 총회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함
  - 그러나 유엔은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안보리 체제와 안보리 결의에 대한 공신력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 1968년 NPT 체제에 대한 훼손

- 러시아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써의 의무를 방기함
- 1968년 구축된 NPT는 러시아를 포함한 5개 국가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비핵국가를 향한 책임 있는 행동을 규정한 바 있음
  -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가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입장을 규정한 NPT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양상임
  -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군사적 직접 개입을 삼가는 나토를 향해 핵위협을 부과하는 등 NPT 원칙을 무시함
  - “핵전쟁이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며 “핵무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2022.6.3.)

##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북한)

### □ 북한은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전쟁을 옹호

- 북한은 푸틴의 전쟁에 철저하게 동조 중임
  - 북한의 첫 의견 표명은 2월 26일 “국제정치학회 연구사 리지성” 명의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로씨야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한” 미국에 근원이 있다는 주장임
  - 이를 후 외무성 대변인 기자 질문 답변 형태로 발표한 내용도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을 부각하고 3월 1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북한 외무성 답변을 재인용함

○ 미국 책임론만 부각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음

○ 북한 대외정책의 근간은 '자주'로서 타국, 특히 강대국이 다른 주권국가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북한 문건을 보면 “자주정치는 나라들 사이의 특권을 반대하고  
  령토안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  
  혜의 원칙에 기초”해야 함

○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어긴 러시아 편에 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군 철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불과 5개 국가 중 하나가 됨

□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의 불법적 핵보유를  
  정당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데 장  
  애폴이 되는 두 가지 국제질서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비확산  
  체제(NTP)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북한에 매우 유리하게 작동함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불법 핵보유국으로 규정되고 역시  
  결의안에 따라 제재를 받는 북한은 안보리 공신력이 약화할수  
  록 유리한 입장임

- NPT가 형해화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러시아에 적극 동조하는 동기가 됨

○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주창한 ‘이중기준’ 논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용하여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함

- 북한은 이중기준을 “자기들의 류사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로 정의하고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존재도 소개함(김여정, 2021.9)
-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김정은, 2021.10.11. 국방발전전람회 연설)
- 더불어 “미국의 내정간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것으로 미화분식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자위적 조치들은 도발로 무턱대고 몰아대는 것이 바로 미국식 오만성과 이중기준”이라고 강변함(북한 외무성, 2022.2.26.)

□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동조함으로써 국제무대, 특히 유엔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함

○ 2019년 12월 통과된 자동제재 부과(trigger) 조항을 포함한 유엔제재 결의안 2397호는 5월 말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을 무릎 쓰고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므로  
러시아도 향후 북한을 계속하여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응전략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 I. 우크라이나 사태 본질

#### 가.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

-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전쟁으로 향후 신국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세계사적 사건
  - 켈터 콜더의 유라시아 역사에 영향을 끼친 6대 세기적 사건에 이어 7대 사건으로 등극

#### 나. 전쟁의 본질

- 우크라이나 차원, 외교안보 주권 확보라는 독립 전쟁이자 자유민주주의 수호
- 러시아 차원, 러시아 제국의 부활과 영향력확보라는 패권 경쟁이고 유엔 질서 도전
- 서방 차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유엔 질서 유지라는 체제 가치 경쟁

- 중도 국가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엔 질서 유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

#### 다. 향후 영향

- 동 전쟁전개와 전후 질서 수립 영향 지대
- 최악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 촉발, 중러북 권위주의 체제 간 삼각 연대강화, 식량, 에너지 위기 초래, 유엔질서 와해 등 각자도생, 약육강식, 무질서, 혼란 등 역사발전, 문명발전 퇴보
- 최상의 시나리오는 서방과 우크라이나 승리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유엔 질서 수호
- 한반도의 평화 안정, 평화통일,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과도 직결

## II. 대응관점

#### 가. 역사적 관점

-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적군의 승리와 공산주의화로 70년의 공산주의 지배로 소련 및 많은 국가에 피해 초래
- 이번 사태는 러시아의 고립주의, 제국주의 회귀, 중러북 등 권위주의 연대 강화는 유럽 등 문명사회와의 고립, 경제제재 가속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 한반도를 포함한 여타 세계도 심각

## 한 피해 초래

### 나. 미래적 관점

- 2021년부터 203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년이 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패권경쟁, 러시아 굴기, 권위주의 세계 연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 2030 미중 GDP 서열 역전, 파리기후변화협약, UN SDGs 2030 목표 시한

### 다. 지정학적 관점

-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상유지 세력과 현상타파 세력 간 그레이트 게임 일환 발생
- 피터 자이한의 3대 전쟁론 유념
  - 미국의 에너지 자립화로 고립주의 회귀, 유라시아 3대 전쟁 전망(중동·유럽·동북아)
- 존 미어샤이머의 한반도 7대 대전망도 거시적 관점에서 유념
  - 북핵 문제 해결 난망, 한반도 가장 긴장고조지역, 당분간 통일 난망, 미국의 對한국 핵안전 보장 제공 등

### Ⅲ. 핵심 기준

#### 1. 국가 비전, 국익, 가치 기반 접근

- 국가비전으로는 선진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 G10 국가로서 글로벌 파워 진입 위한 대전환 계기
- 국익 차원에서는 양자. 다차원의 다층적 안보 확보, 식량 에너지 등 포괄적 안보 확보, 경제 다변화, 신시장 개척 진출 등 미래 리스크 예방강화 및 미래 선제적 대응
- 가치기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G10 선진국으로서 책임과 역할

#### 2. 실용적 균형적 접근

-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적극 동참과 함께 대러시아 협력방안 동시 강구
- 러시아의 정치발전 경제발전 통한 유라시아에 건설적 세력균형 담당 지원
  - 러시아의 국력 약화, 고립, 왕따 지양(건강한 러시아 발전, 유라시아 세력균형 역할 필수)
  - 극동러시아 등 대러시아 구체 협력방안 동시 강구
- 중앙아시아 등 범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방안도 추진, 균형



유지 필수

- 지정학 리스크 최소화, 경제, SDGs 등 비정치적, 글로벌 이슈에 초점

### 3. 글로벌 파트너와 공감 확보

- 미국 서방 등 전후복구, 전후 질서 중심세력과의 공감 확보
  - 우리의 재원부담 등 책임과 역할 합의 필수
- 우크라이나와의 공감 확보
  - 미국은 전후복구에서 우크라이나의 ownership 존중 입장
  - 전후복구 참여시 우크라이나와의 공감대 조성 필수(우크라이나도 한국을 롤 모델로 간주, second Korea in Eastern Europe)
- P4G 차원의 공감 확보
  - 지나친 자유민주주의 등 이념적 경사 지양
  - 전후복구사업의 성공 담보, 우리의 부담 완환, 국제여론조성 등 차원
  - SDGs 라는 공동의 미션 공유
  - 향후 중진국 외교 네트워크 확대 가능

### 4. 미래 리스크 선제 대응

-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핵도발 등 안보 위기와 중러 등 다양한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 대중 무역 의존도 축소, 경제 다변화, 대체 에너지 식량 안보 확보

#### 5. 북중러 중 삼각 협력 등 대북 우회 협력 및 중,러 균형 추진

○ 두만강, 연해주, 훈춘 등 개발 참여

○ 나진, 하산 프로젝트, 철도, 전력망, 가스관 등 삼각협력 추진  
검토, 연해주 기반 대규모 농업 현대화, 산업 현대화 참여 등

#### 6. 협업

○ 국내 차원에서는 민·관·산·학·연 Team Korea 구축

○ 우크라이나, 서방, 국제 NGO 등 협업기반 구축

#### 7. 보편성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 보편적 가치와 UN의 가치 정신  
질서 존중 (국가의 주권 영토 독립 존중)

#### 8. 창의·혁신의 대범한 접근

○ 새로운 전후 질서 적극 동참, 유라시아 SDGs 실크로드 구축 등  
대범한 구상, 비전 도전

○ 우리의 G10, 선진국, 글로벌 파워로서의 자신감, 세계경영 안목기반

- agenda-setting, ruling-making 주도적 역할 등 리더십 발휘
  - 미국 유럽 등 뉴 마셜플랜 추진, 천문화적인 자금 확보,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및 기구 수립, 현행 유엔의 한계 보완 등 전후 질서 구축에 주도적 창의적 역할
- 우리의 경쟁력, 차별화 된 장점 활용
- 한국의 6.25 경험, 국가발전경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범 국가
  - 우크라이나의 한국 롤모델로의 호감
  - 한류 등 국가 이미지 보유
  -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처리 등 재난재해 신속복구 경험 등 한국만의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 전지 필수
- 중진국의 객관성, 투명성, 균형성 등 지정학 부담 완화와 중진국 네트워크 보유(P4G, MIKTA)

#### IV.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 우리 대응전략

1. 범 자유 민주주의 진영 내 동맹 강화 및 전후 질서 구축 적극 참여 (단기 목표)
  - 1)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 구축
  - 2) 자유 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승리를 지원하고 추후 전후 질서 구축 및 복구 사업의 참여 기반 마련
    - 미국 등 뉴마셜플랜 적극 참여

- 3) 신 정부의 對유라시아 외교 정책 가치, 국격 외교를 위한 시험  
과제(Pilot Project)의 성공적 추진
- 4) 우리 기업의 전후 복구 사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식량 안보 강  
화 및 성장 동력 발굴

## 2. 對유라시아 SDGs 외교 본격 추진 (중·장기 목표)

- 1) 2021년부터 2030년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년 전망  
-Post COVID 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  
등)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주도권(Initiative) 확보 필요
- 2) 동북아시아 SDGs 5개년 로드맵 추진
  - ✓ 2022년 일본, 2023년 블라디보스톡, 2024년 남북한 공동개  
최, 2025년 중국심양, 2026년 대한민국.
- 3) 유라시아 내 5 리틀 코리아 구축 추진 (SDGs 허브 구축)
  - ✓ 블라디보스톡, 몽고,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르비우, 몰도바.
- 4) 2024년 결정적 시점화
  - ✓ 2022년 홍길동 주제로 한 활빈 드라마, 영화, 메타버스 활용  
문화 콘텐츠 연계.
  - ✓ 2023년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
  - ✓ 2024년 3대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 (IOC 동계 청소년 올림픽,  
로잔 총회 (50주년 기독교 올림픽) 한국 개최 확정.

- ✓ 유엔 조달기구, 국내 SDGs 조직위, SDGs 엑스포 남북공동개최 추진.

#### 5) 對유라시아 SDGs 실크로드 구축

- ✓ 1단계: 농업 메가 프로젝트 추진 (벨류체인 기반, 100만 헥타 규모,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상)
- ✓ 2단계: 메가 프로젝트 유라시아 허브 구축으로 농업 실크로드 구축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확대)
- ✓ 3단계: 농업과 연관된 에너지, 환경, 바이오, 유통, 물류 등 확대로 Multiple Silk road 완성 (수평적 통합)

## V. 안전장치 구축

### 1. 국론 분열 등 틈새 방지

-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 여론지지 확보 필수
- 초당적 외교추진
  - 전후복구, 유라시아외교 관련 여야간 정치 문서 채택 등

### 2. SDGs 적극활용

- 비정치적, 글로벌 과제, UN 과제로 러시아의 경계 불식 가능
- 우리 경쟁력 최대 활용, 반기문 사무총장 산파 역할 등 우리 오너십 발휘

○ SDGs 추진 위한 중진국 클럽 P4G 등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 3. P4G 등 중진국, 제3 중도 국가들과 포괄적 연계

○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지나친 이념적 경사 지양 필요

○ 미들파워 참여 및 확대로 미들파워 네트워크 강화

○ 중동 등 제3세계 연계 에너지 식량 안보 확보 및 국제지지 확보

### 4. 對러시아 협력, 對중아시아 협력 동시 추구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균형 도모

○ SDGs 명분으로 자칫 러시아내 반한 감정 불식 필요

○ 식량 에너지 안보 확보와 동시에 향후 지정학 리스크 상시화 대비

### 5. 대중의존도 대비

○ 대중 무역 의존도, 중국·미국 간 갈등 대비

- 미국, 중국, EU 갈등으로 중국의 對미, 對EU 수출 대폭 감소  
(30%)에 따른 틈새시장 활용 필요

### 6. 대북협력 우회 전략 및 중·러 균형협력기반 구축

- 두만강 개발, 남북러중 소다자 협력 등 우회 협력 추진
- 나진-하산 협력, 철도, 전력망, 가스관, 농업 등 SDGs 기반 3각 협력 재추진





## 토론문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제1주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한국의 선택은?

- 김흥규 교수님의 발제문은 최근 국제정치 상황과 전개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그 논지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민족간 내전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 구조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임.
  - 미국의 민주주의 세력(자유민주동맹) vs. 권위주의 세력(중, 러, 북)의 대결이라는 냉전시대 미소경쟁과 같은 신냉전 시대 미중경쟁의 양대진영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는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의 선두에 중국전제라는 큰 틀 속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대립(냉전시기)→포용(데탕트시기)→협력(WTO가입)→경쟁(무역전쟁)→충돌(대만해협 ?)진화하고 있음.
  - 신중국 성립이후 모택동을 제3세계론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3세계(미국, 소련, 비동맹)로 분류하여 대외정책을 추구하였는데 21세기 천하세계(자오팅양, 2005) 천하 3분론적인 관점(김흥규, 2021)을 제시하였음. 중국의 천하 3분론적인 관점은 미국 중심의 세계(미국의 60여개 동맹과 우호국) vs. 중국 중심의 세계(중

국과 제1무역국가 120여개국) + 자율성 추구하는 서유럽 강대국들의 3각 구도(1960년대 중간지대론과 흡사) 상정한 것은 일리가 있는 구분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규칙제정자(Rule-maker)로서의 위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음.

○ 미중경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하락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사회를 4대 영향권으로 권역화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 vs 중국 vs 러시아 vs 서유럽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전통 지정학 정치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러시아는 중러 vs 서구 구도를 구상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중국의 대 러시아 거리두기가 현실화되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미국의 대중경제 압력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인 공세(정치군사: 인도태평양전략/IPS, 정치경제적: 인도태평양경제프러임워크/IPEF, 정치문화: 자유민주가치동맹)로 현실화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러 전면적 전략협력(協作)에서 보다 신중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대러 협력은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행동만 제외한 대러관계를 준동맹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이 대 러시아 정책에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한다면 향후 세계질서는 중-러관계, 미-중관계, 러-서유럽/미-서유럽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체스판은 재조정될 것임.

-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새로운 국제정치 이합집산의 촉발을 가속화하여 ▲신냉전의 절정, ▲양초다강의 복합적 다극화, ▲G-Zero(혼돈)시대의 도래 등을 예측할 수 있음.

○ 현재 한국 주변 상황은 정치, 군사, 경제, 역사 등 다방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 또한 한국의 운신 폭을 확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군비지출 및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경쟁 지역(미, 러, 중, 일, 한은 세계 제1, 2, 3, 5, 6위의 군사강국. 북한은 핵보유),
- 세계 최대 경제강국 경쟁 지역(미, 중, 일, 한, 러는 세계 제1, 2, 3, 10, 11위의 경제 강국),
- 영토분쟁이 조밀하게 얹혀있는 지역(일러 간 북방 영토분쟁/한일 간 독도 분쟁/남북한 간 NLL 분쟁/한중 간 이어도 분쟁/중일 간 댜오위다오 분쟁 등),
- 한일 과거사 분쟁-한중 역사문화공정 분쟁-중일 간 과거사 분쟁 등 진행중임.

질문: 미국의 영향력이 쇠락해지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문제도 깊이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김교수님이 제시하신 親美-協日-聯西歐-和中-通俄-牽北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전술자산의 고도화는 한국의 안보에 너무나 위험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자들은 북한의 전술핵과 미사일이 설마 동족을 겨냥해서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상호확증파괴력이 구비됐을 경우만 상대방과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 대중국 상호확증 파괴력을 어느 정도 구비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자체 핵무장? 미국의 핵전력 한국 실전배치? 미국의 핵전력 자산 신속 지원 및 전개? 기타? 한미일 삼각 동맹(공조 아님)은 필요한가? 등 등...

## 제2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 웅현 교수님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목적을 ▲범러시아 주의, ▲유라시아연방의 건설을 위한 소비에트로의 회귀, ▲NATO의 팽창에 다른 안보위협을 제시하였음.
  - 이 교수님이 언급한 세 가지 원인과 목적은 상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라고 생각됨.
  - 물론 필자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침공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세 가지의 총합이 침공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해 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인식에 동의함.
- 하지만 적어도 금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이러한 상기 언급한 배경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인에 따라 러시아의 침공 목적은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중립화(괴뢰국가 성립),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Novorossiya 완충지대 설정, ▲우크라이나의 합병까지 고려한 ‘제2차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 러시아가 NATO의 확장을 저지하고 탈출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것임.
  -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면 핀란드와 벨로루스를 제외한 러시아의 유럽 쪽 접경국가 모두가 대 러시아 군사동맹을 형성하여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동맹에 포위되어 상당한 안보적 위협에 처하는 것임.(2022년 2월 러시아의 제2차 우크라이나

- 침공에 반발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은 5월 NATO 가입의사 표명.)
- 중국도 아시아판 NATO결성(쿼드 확장문제)을 우려하고 반발하는 것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포위될 경우 중국은 해양진출의 출구를 봉쇄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임.
  - 러시아로서는 러시아의 봉쇄와 고립' 현상을 타개할 출구를 확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어도 괴뢰정권으로 추락시킬 수요가 커진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단기성 또는 장기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쟁의 결과는 분명 21세기 중후반 이후 포스트 국제질서(체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도래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 후의 국제질서 변화는 ① 단극 체제로 미국의 위상 불변, ② 미중 양극 체제로 국제질서 개편, ③ 양초(미중)-다강(러시아 포함) 체제 등장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음.
- 적어도 유럽지역에서 EU와 유라시아 연방(푸틴의 구상)간의 대립과 경쟁체제는 가시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가운데는 대러 군사적 대립은 고도화될 수 있겠지만 대러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견인하기는 역 부족임.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국제질서는 극단적인 양극 대립 보다는 러시아의 팽창을 봉쇄하는 수준에서 대립과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서방과 러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과 종전 상황에서 전후 동북아의 국제질서 개편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존의 물음임.

- 과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또는 종료 이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세기 이후 국제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유럽의 국제질서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반드시 연동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북아시아에 지정학적인 명분(commitment)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유럽에서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를 중국이 지지하는 상황에서 두 대륙의 정치적 상황변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임.
- 동북아시아에서 예상되는 구도는 자유민주세력 vs 권위주의 세력으로 양분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 한국은 세력균형과 헤징 그리고 편승의 트릴레마에 빠지게 될 것임.
- 핵심적 논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동조하는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미치는 영향,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다는 사실, ▲푸틴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언급으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threshold)이 낮아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동향, ▲이와 같은 대륙 동맹의 강화에 대한 해양세력인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연대의 항방 등 해륙국가 한국의 대응이 중요함.

질문: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면 될까요? ▲한국의 군비 확장 또는 핵무장론의 확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통해 북한을 움직여 보자는 정책이었거든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중려는 한국이 등한시할 국가는 아닌듯합니다. 적으로 지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제2의 북방정책을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제2세션**

# **우크라이나전쟁이 촉발한 안보 개념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발표**

###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군비경쟁 심화와 신기술 안보 위협**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신정부의 경제안보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토론**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군비경쟁 심화와 신기술 안보 위협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해

#### 가. 우크라이나 사태 복기

-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3~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민운동(2차 색깔혁명), 러시아에 의한 크림 강제 병합, 돈바스 분리 주의 내전을 총칭
  - 2013년 반정부 시민운동: 친러시아 vs. 탈러시아 정책의 충돌
    - 2013년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통상 경제협력 강화 정책 발표
    - 2013년 11월부터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시작
    - 2014년 1월부터 언론자유제한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본격화 등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사태 격화 등 전국적 무정부 상태 돌입
    - 2014년 2월 27일, 소치 동계 올림픽 종료 이후 러시아군 크림

## 지역에 전적 군사개입

- 크림 강제 병합: 러시아의 제국주의 증후군 발현, ‘노보 러시아’ 야욕의 서막
  - 크림반도 의회, 러시아 편입 국민투표(3.16.) 실시(97% 지지)로 러시아 편입 결정 및 푸틴 대통령의 크림 반도 전승기념 행사 참석
- 돈바스<sup>1)</sup> 분리주의: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감행한 형식적 이유
  - 2014년 4월초 도네츠크, 루한스크, 하르키우 등 동부 주요 지역에서 반정부/친러 시위 발생
  - 돈바스 일부 지역 친러 분리세력 독립 투표 시행 및 89% 지지율로 분리 독립 결정. 돈바스 분리 독립 이후 정부군-반정부 간 군사적 갈등 지속
  - 2014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재로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도네츠크 - 루한스크 간 민스크 협정<sup>2)</sup>을 체결했지만 정부군-반정부 간 유혈사태 지속

---

1)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전기 생산의 20%, 석탄 및 여타 자원별 30~70%가 매장된 지역으로 정부 예산 수입의 25% 점유. 돈바스에는 금속, 기계, 화학 등 주요 중공업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마리우폴은 최대 교역항으로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약 30%를 소비하는 최대 경제지구로 평가.

2) 민스크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즉각적인 정전조치 시행; ② OSCE의 정전 모니터링 및 검증 보장; ③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일부지역에서 임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분권화 시행(특별지위에 의한 법률제정); ④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지대를 조성, OSCE에 의한 항구적인 모니터링 제공 및 검증; ⑤ 즉각적인 모든 인질 및 불법 억류자 석방; ⑥ 돈바스 사태 관계자 처벌(수사) 금지 관련 법안 제정; ⑦ 포용적인 국민과의 대화 지속 ⑧ 돈바스지역 인도적 상황 개선대책 수립; ⑨ 돈바스 지역 특별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기 지방선거(3번 경과 연계); ⑩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불법 군대 및 장비, 무장세력, 용병 철수; ⑪ 돈바스 지역 생활개선 및 경제회생프로그램 이행; ⑫ (후진)회담 참석자 안전보장.

□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러 제재 시행 및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대서방 국가들과의 전향적 협력 본격화

○ 미국 및 유럽연합 등 서방 28개국의 대러 제재 시행으로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매년 0.2p 하락, 1인당 GDP 1.5%p 하락

- 기업성과 약화 및 수출감소, 대외 러시아 경제정책 왜곡 및 민간 투자 여건 악화 등 성장잠재력 위축

- 러시아는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서방이 지원하는 색깔혁명을 특정하고 군사안보와 동일한 수준의 위협으로 관리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미 적대意識 강화<sup>3)</sup>

| 〈 위협인식 〉 |      |      | 〈 위협요인 〉 |                |                |
|----------|------|------|----------|----------------|----------------|
| 구분       | 2007 | 2015 | 순위       | 2007           | 2015           |
| 매우 위협    | 16%  | 19%  | 1        | 경제제재(51%)      | 러시아 발전 방해(48%) |
| 위협       | 31%  | 40%  | 2        | 미국식 가치강요(44%)  | 경제제재(40%)      |
| 보통       | 32%  | 26%  | 3        | 러시아 발전 방해(39%) | 미국식 가치강요(36%)  |
| 위협이 아님   | 10%  | 6%   | 4        | 내정간섭(38%)      | 군사적 위협(31%)    |
| 무응답      | 11%  | 9%   | 5        | 군사적 위협(21%)    | 내정간섭(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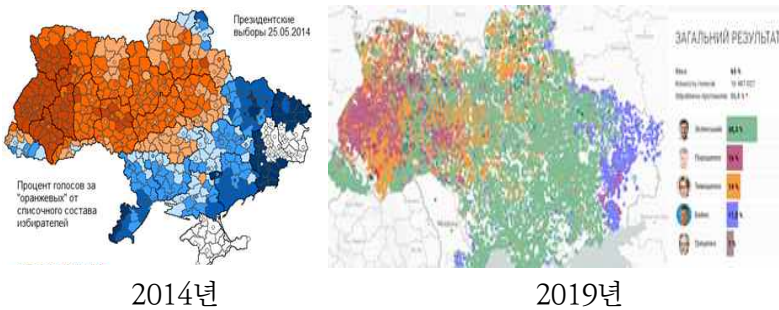
-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및 코로나19 관련 보건협력 등을 활용,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 복원 등을 통해 서방의 대러 적대정책 와해 시도 지속

3) 레바다 센터 ([www.levada.ru](http://www.levada.ru)).

○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자각의식 제고 및 대외정책 변화

- 2014 러시아의 크림 강제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내 대러 적대의식 강화,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 여론 증가
- 크림 병합 이후 주요 선거에서 친러 세력 후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 약진, 동서 간 국론 분열 해소 등 러시아의 대우크라 영향력 감소

〈그림 1〉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



- 우크라이나는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전면적 침공을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특정,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2019년 개정 헌법에 NATO 및 EU 가입의지를 제도화하고 대서방 지역과 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

〈표 1〉 미국-우크라이나 전략적 협력 관계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2021.9월)

【 군사협력 】

- 1)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불인정,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전면적 지원
- 2) 미·우크라 間 국방·방산·정보·사이버·해양안보 등 포괄적 국방안보 협력 심화를 위한 「전략적 국방협력 틀」 구축
- 3) 우크라이나 NATO 가입 권리 재확인 및 NATO 가입 지원
- 4) 금년 內 대전차무기 등 총 4.6억불 규모 군사장비 우크라이나 지원
- 5) 우주·방산분야 협력협정 체결 및 사이버안보 분야 양자간 협의체 창설

【 에너지 협력 】

- 1) 러·獨 가스관(노드스트림-2) 연결 이후에도 러·유럽 間 가스관 수송 통로로서 우크라이나의 입지 보장 지원
- 2)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지원
- 3) 에너지 분야 전략대화 통해 공동의 전략목표 조율

- 러시아 위협 대비 및 중·장기적으로 NATO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미-NATO 군사고문단 지원下 서방과 상호운용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 〈표 2〉 우크라이나의 국방개혁 추진 중점

- 목표: 동부 지역 러시아의 무장공격 제압 및 나토 가입을 위한 기준 충족
- 국방개혁 핵심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능력에 기반한 중장기 국방계획 수립,  
△참모시스템을 서방 기준으로 변경, △나토 기준에 의한 작전·전투 능력 배양
- 미국 및 나토 국가들의 지원·협조 하 국방개혁 추진
  - 국방부 및 총참모부에 군사 고문단 파견
  - JMTG-U(Joint Multinational Training Group-Ukraine) 프로그램에 의한 우크라이나 군 장병 교육
  - ‘Rapid Trident(육)’, ‘Sea Breeze(해)’, ‘Clear Sky(공)’ 등 미국 및 NATO 군과 연계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 강화

## 나. 전쟁 이전 전략상황 평가

- 2021년 3월, 돈바스 상황 불안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 '21. 3월,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반정부 간 교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 발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반정부군을 지원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한 다며 국제사회의 관여 요청
    - 러시아군, 돈바스 우발상황 대비 ‘불시 전비태세검열’ 형태로 서

부·남부군관구<sup>4)</sup>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집결,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전비태세 검열 이후 돈바스 지역의 상황 악화 대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일정 규모의 병력을 상시 배치 지시

□ 서방은 러시아군의 의도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징후로 판단, NATO 차원의 연합훈련(Steadfast Defender, Sea Breeze)으로 맞대응

- '21년 6월 러시아 국방부 영국 군함의 흑해 침범 관련 차단기동 및 경고사격 등 전술조치 시행
- '21년 10월~11월경 NATO군이 러시아와 인접한 흑해 및 발틱 지역 인근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에 대해 러시아는 '엄중한 도전'(크레린궁), '도발'(외무부)로 규정,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천명
- 이와 관련 러시아군은 서부 및 남부 군관구 일대에 병력 추가 증원, 우크라이나 및 NATO는 이를 러시아의 침공 의도로 판단, 전쟁 가능성 확산

□ 전쟁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외교적 해법 모색

- 러시아-미국, 러시아-NATO, 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 등 연쇄 회담('22. 1. 9~13.)
- 미러 정상 화상회의('21. 12. 30, '22. 2. 12.),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러(2. 7.),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방러(2. 15.)

---

4) 러시아군은 5개의 독립군관구(동부·서부·남부·중부군관구, 북양함대)를 중심으로 작전 구역 구분.

- 안전보장에 관한 협약 문서<sup>5)</sup> 서면 교환 등 미러 간 전방위 외교적 해법 추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계기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독립 승인('22. 2. 21.), 대국민 담화 직후 우크라이나 침공('22. 2. 24.)

〈그림 2〉 우크라이나 사태 일지



## 다. 전쟁 원인

□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별군사작전의 이유와 취지에 대해 △NATO 확장에 따른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협정 위반, △자국민 보호를 언급

-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지침을 기초로 전쟁 과업을 △서방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러시아 방어, △돈바스 지역의 자국민 보호,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및 탈나치화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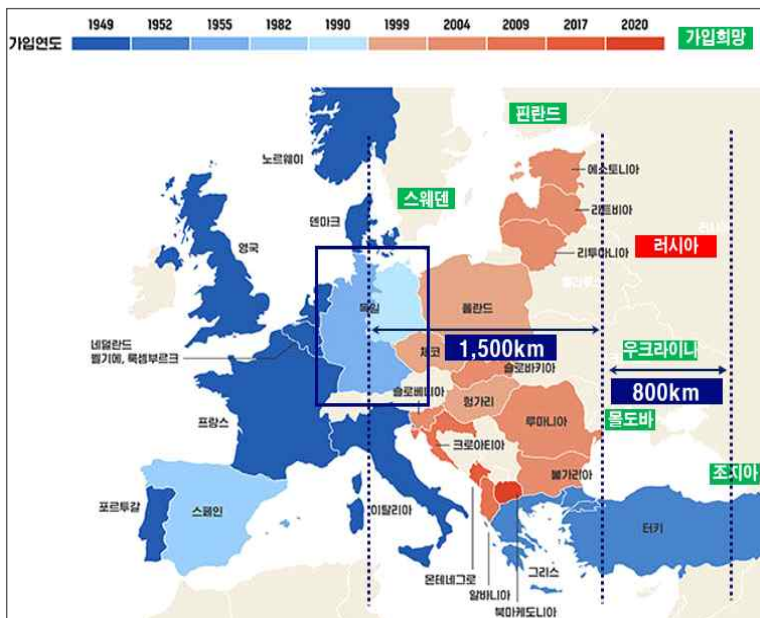
5) 러시아가 미국에 제안한 안전보장 요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차 금지 및 나토의 확장 중단, ② 러시아 국경 인근에 나토 군사력(MD 및 중단거리 미사일) 철수, ③ 우크라이나, 동유럽, 카프카스, 중앙아 등의 지역에서 나토의 군사활동 금지, ④ 우크라이나 개헌을 통해 돈바스 지역의 특별자치권 지위 부여로 돈바스 사태 해결 모색.



□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역사·문화적 상호의존성이 높고,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민족’이자 NATO 위협을 완충하는 사활적 이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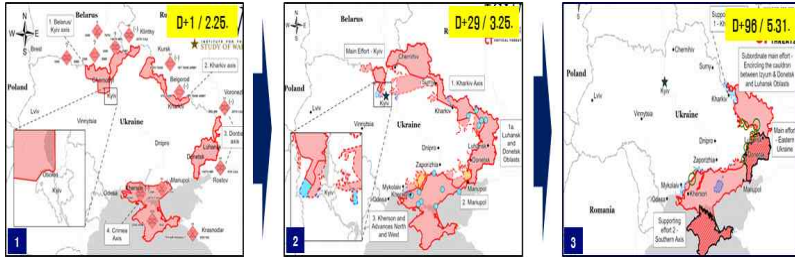
- 러시아는 NATO가 확장하는 것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방이 약속한 ‘NATO의 확장 금지’ 원칙을 부정하는 기만행위로 평가
- 동유럽 주요국가들이 NATO에 가입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그림 3〉 NATO 가입 현황



## 2. 전황 평가

### 가. 현 상황 평가



1.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개전 2~3일 내 키이우 함락 우려
2. 3월 25일, 러시아 국방부 1단계 작전 종료 후 돈바스 지역에 전투력 집중 발표
3. 5월 31일, 러시아군 돈바스 지역 90% 이상 점령, 2단계 작전 성공 발표 임박

## 나. 향후 전망

| 구 분       | 내 용                                                                                                                                                                                                                                                                                                                                           |
|-----------|-----------------------------------------------------------------------------------------------------------------------------------------------------------------------------------------------------------------------------------------------------------------------------------------------------------------------------------------------|
| 외교<b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푸틴 대통령, 제77주년 전승기념 행사 계기 나치즘에 대항해 함께 투쟁한 서방의 역할 긍정 평가 등 외교적 해법 의지 간접 표명</li> <li>• (우) 휴전협상 관련 소극적 태도 등 외교적 해법을 서방에 위임</li> <li>• (국제사회) UN 사무총장 러-우 연쇄 방문 등 외교적 해법 지속 모색</li> </ul>                                                                                                             |
| 정보<br>(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주공간으로의 확장</li> <li>• 어나니머스등 비국가행위자의 대리 사이버戰 지속</li> </ul>                                                                                                                                                                                                                                 |
| 군사<br>(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서방 추정 15,000~20,000여명 사상자 발생 및 전쟁 장기화로 작전한계점 도달 가능성, 2단계 작전목표 확보 및 작전지역 확장 가능성</li> <li>* 전쟁 장기화 및 북유럽 NATO 강화에 따라 서부군관구 연내 14개 부대 증편</li> <li>• (우) 서방의 전방위 지원하 전쟁 목표를 방어에서 러시아 격퇴로 변경, 러시아군의 돈바스 점령 이후 전황 여건 불리 예상</li> <li>• (국제사회) 핀란드 및 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 등 대리 봉쇄 연대 지속, 대우크라 무기지원 강화</li> </ul> |
| 경제<b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경제성장률 후퇴(4.1% → 3.2%), 우크라이나 GDP 40% 감소 예상,</li> <li>미국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도미노 효과 등 경제오염 심화</li> <li>• 에너지 및 밀, 옥수수 등원자재 가격 지속 상승</li> <li>*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심화 등 동절기 도래 전후 유럽연합의 '대리 제재 연대' 약화 가능성</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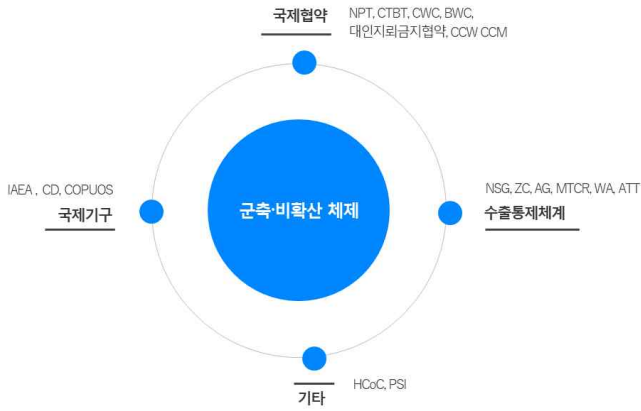
### 3. 시사점

#### 가. 군축·비확산 문제 심화

##### □ 이론적 검토

- 군축(disarmament): 현재 보유 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방어적 목적의 군비보유도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군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안전보장 달성 추구
- 군비통제(arms control): 국가 간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 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으로, 군비 경쟁을 적정수준으로 관리(동결 · freeze, 제한 · limitation, 감축 · reduction)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
- 비확산(Non-Proliferation):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생산, 비축, 배치, 사용 이전 등에 대량살상무기(WMD)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및 활동

〈 그림 4 〉 군축·비확산 체제



#### □ 현상 분석

-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등 핵무기 운용부대의 대비태세 강화 및 전술핵 사용 관련 대서방·대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 위기조성, 신기술이 탑재된 전략무기(극초음속 미사일) 사용 등 국제규범의 사각지대 활용
  - 푸틴 대통령, 개전 4일 만에 전략미사일군, 장거리항공사령부 등 핵무기 운용부대의 대비태세 격상 지시
  - 전략미사일군, 4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 칼리닌그라드 전략미사일군, 5월 이스칸데르-M 기반 전술핵 발사 훈련 및 러시아 국영방송(Russia 1), 러시아군 핵태세 시물레이션 결과 영상 송출

□ 러시아의 핵사용시 NPT, TPNW, New START 등 관련 국제규범  
무력화 및 글로벌 전략적 안정 시스템 붕괴

- 러시아의 핵사용시 핵보유국(P5) 의무준수 약화 및 핵보유국의  
핵투발을 고려한 핵군비증강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핵군비경쟁 심  
화, 수평적·수직적 핵확산 현실화 등 NPT 파기 가능성
- 핵무기금지조약(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제도화 좌절 등 비확산 체제의 중층적 노력  
이 사문화될 가능성
- 러시아의 핵사용시 New START 조약 파기 등 미리 간 전략적  
안정 시스템 붕괴 및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 가능성
- 러시아 동부군관구 및 태평양함대의 핵전력 강화시 동북아 지역  
긴장 등 연쇄효과

○ 미국 및 나토, 유럽연합의 대러 대리전 심화 및 무기 지원 강화,  
핀란드 ·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따른 확장억제력 확대 가능성  
등 군비 증강 추세

〈표 3〉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현황

| 국가    | 군수물자         |             |                    |       |
|-------|--------------|-------------|--------------------|-------|
| 미국    | 스팅어 대공미사일    | 1,400       |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 700   |
|       | 재블린 등 대전차미사일 | 12,500      | 피닉스 고스트 드론         | 121   |
|       | MI-17 헬리콥터   | 16          | M113 장갑차           | 200   |
|       | 155 mm 곡사포   | 90          |                    |       |
| 영국    | 새슨 장갑차       | 120         | 대함미사일              | 미상    |
|       | 재블린 등 대전차미사일 | 10,000      | 스타스트릭 대공미사일        | 미상    |
| 체코    | T-72 전차      | 5 (비공식 100) | 대공미사일              | 160   |
|       | BVP-1 장갑차    | 58          | 박격포                | 4,000 |
| 폴란드   | T-72 전차      | 200대 이상     | Piorun 대공미사일       | 미상    |
|       | Gvozдика 자주포 | 미상          | 공대공미사일             | 미상    |
| 캐나다   | M-72 대전차무기   | 4,500       | 수류탄                | 7,500 |
|       | 장갑차          | 8 이상        | 155 mm(M777) 곡사포   | 미상    |
| 독일    | PbV-501 장갑차  | 56          | 대전차 무기             | 1,000 |
|       | 스팅어 등 대공미사일  | 2,000       | Gepard '치타' 대공전차   | 50    |
|       | PzH2000 자주포  | 7           |                    |       |
| 프랑스   | MILAN 대전차미사일 | 미상          | CAESAR 자주포         | 미상    |
| 에스토니아 |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 미상          | 122mm howitzer 곡사포 | 9     |
| 덴마크   | M-72 대전차무기   | 2,700       | 스팅어 대공미사일          | 300   |
| 네덜란드  | 장갑차          | 미상          | PzH 2000 자주포       | 미상    |
|       | 스팅어 대공미사일    | 200         | 로켓추진 유탄발사기         | 400   |
| 슬로베니아 | M-84 전차 미상   | 스페인         | 대전차유탄발사기 1,370개    |       |
| 이탈리아  | 스팅어 대공미사일 미상 | 라트비아        | 스팅어 대공미사일 미상       |       |

○ 독일, 연내 GDP 대비 국방비 2% 지출 등 NATO 회원국의 군비 확충 본격화

- 최근 독일은 여야 합의로 군 현대화를 위해 133조원을 투입하는 데 합의, NATO의 공동 방위공약 기준인 GDP 대비 국방비 2% 지출 달성 유력
-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최근 국내 여론이 증가 추세(44%→60%)에 있으며, 현재 GDP 대비 1%의 방위비를 2%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여론 확산(찬성: 56%, 반대 31%)

## 나. 신기술 안보 위협

□ 군사안보와 관련된 신기술<sup>6)</sup>

| 미래 유망기술 | 미래 신기술                                      | 우크라이나 사태 적용   |
|---------|---------------------------------------------|---------------|
| 신소재     |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대응용<br>경량방호소재 기술               | 지향성 에너지       |
| 가상현실    | 초실감 모의전장 환경 구현 기술                           |               |
| 에너지     | Solar Power Statellite 기반 중장거리<br>무선전력전송 기술 |               |
| 인공지능    | 시공간 초월 전술맵 수립 기술                            |               |
| 센서      | 감각센서 네트워킹 기반 능동제어 기술                        |               |
| 신추진     | 차세대 우주 고기동·장수명 추진 기술                        |               |
| 사이버 보안  | 인공지능 기반 아바타 신원 인식 및 인증<br>기술                | 사이버 침해        |
| 무인로봇    | 하이브리드 LiDAR-OCC 기반 군사 로봇<br>전용통신 기술         | 무인공격기,<br>드론봇 |

6) 「첨단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미래 신기술 예측」,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2), pp. 14-113.



□ 극초음속 무기개발 및 국제 통제 문제, 우주 군비경쟁 방지 및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등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안보 위협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일부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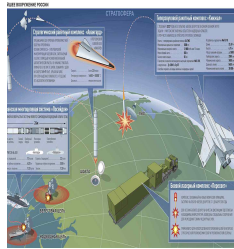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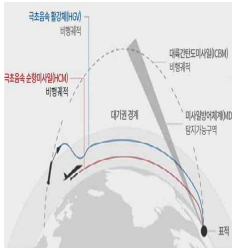
- 극초음속 무기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마하 5(1.7km/s) 이상의 속도를 보유한 비행체를 의미하며, 기존 탄도미사일도 포함<sup>7)</sup>
-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수회에 걸쳐 ‘킨잘(Kh-47M2)’<sup>8)</sup>을 우크라이나 본토에 발사했으며, 향후 전선의 교착상태에 따라 ‘치르콘(극초음속 순항미사일)’<sup>9)</sup> 등 극초음속 무기의 추가 사용 가능성
  - 러시아는 향후 대미·대NATO에 군사적 우위 달성을 위해 비대칭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조기 전력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7) 대표적인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순항미사일, 활공체)과 재사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항공기로 구분. 극초음속 무기의 군사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음.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계 어디든 1~2시간 이내에 경고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전략표적에 즉각 대응이 가능. 요격확률을 현저히 줄이고, 빠른 속도와 정확성 향상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 이동표적을 신속하게 타격.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이 궤적이 불확실하고 고속 기동성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센서와 네트워크, 교리와 조직 등을 갖춘 새로운 방어체계가 필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여 △방자에게는 통합방공체계를 갖춘 A2/AD 극복에 효과적이며, △방자에게는 항공모함 등 敵의 접근을 원거리부터 차단할 수 있어 A2/AD의 완성도 제고.

8) 킨잘은 공대지 극초음속 활공체로 사거리 3,000km, 마하 10의 속도로 2,000km 떨어진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며, 레이더 회피 기능이 탁월하고 기동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9) 치르콘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평균 사거리 400km, 마하 8의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함정 및 잠수함, 공중자산 등 모든 플랫폼에서 발사 가능.



〈그림 5〉 극초음속 무기 궤적

〈그림 6〉 러시아판 3축 체계

- 미러 간 New START 협정 활용, 별도의 군비통제 협정 체결 모색, 관련국 간 비구속적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TCBMs) 합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를 통한 수출통제 방안 모색으로 안보 위협 대응 필요

○ 미국 및 NATO는 감시·정찰 위성에서 제공한 정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징후를 포착,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공중우세 확보를 제한. 한편 스페이스X社は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제공으로 전쟁에 간접 관여

- 러시아는 우주기술의 전통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유한 군용통신 및 정찰 항법(GLONASS) 위성의 효과적 활용 및 군사효과 발휘 제한<sup>10)</sup>

\* 특히 러시아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스타링크에 대한 전자기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

-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서방은 대러 우주우세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위성 기술 기반 하 공세적으로 정보작

10) 러시아는 174대의 위성(군용 106, 상용 68)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1,450대의 위성(군용 221대, 상용 1,229) 보유.

전을 수행했으나 러시아는 우주·공중우세 확보 실패

- 한편, 러시아는 대미·대NATO 우주·공중우세 달성을 위해 지상기 반(S-500) 反위성 극초음속 무기(운동성) 및 페레스벳 (Peresvet) 등의 비운동성 무기를 본격 사용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지상형 페레스벳은 전쟁에 투입되어 드론, 무인공격기, 항공기 등 우크라이나의 공중전력에 대한 공격임무 수행

## 다. 종합적 관점

- (세계적 수준)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갈등 구조 심화, 군사안보 영역이 경제 및 기술안보 분야로 확장 → 신냉전 도래 및 세계화 종언 가능성

- (지역적 수준) 한미일 vs. 북중러 연대 심화 및 중러의 대한반도 무력시위 증대 가능성

- 중러 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관계에 기반 KADIZ 진입, 우리 영공 침범 및 영해 근접 기동 등 군사적 압박 강화 가능성
- ICBM 발사 및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위기상황 조성시 중러는 UN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 연대 약화 시도
- 북한의 핵 모험주의 경도 심화 및 중러 주도 집단안보체제(SCO, CSTO)의 확장 가능성

□ (국가적 수준) 한반도 평화·번영 여건 조성 및 글로벌 차원의 국가 위상 제고

-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위한 한일 간 전략적 국방교류협력 추진 및 대중·대러 전략적 소통 병행으로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능동적 위협 관리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비 동맹 차원 및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방안 적극 모색
- NATO 확장이 UN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평가 등 대응방안 검토

□ (군사적 수준) 대북 억제력 발전 및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심층적 전훈 분석 및 과제 식별

- 한국형 3축 체계 확보로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개선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첨단 군사기술 개발 및 미래 무기체계 발전
  - \*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로 북한의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정보작전 등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 대비
- 작전적·전술적 차원의 연합태세 확립 및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연합작전계획 발전
- 심층적 전훈분석을 통해 한반도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합동전 투발전 소요 적극 식별
- 합동전력 및 재래식·첨단무기 균형 발전, 작전환경의 도시화 및 우주 공간으로의 확장에 따른 민간 인프라 활용 대비 미래지향적 민군관계 발전방안 모색

※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이행, 국제기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 군비통제 레짐 이행 주도,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및 주변  
국의 잠재적 위협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첨단 군사기술  
지속 발전



## 신정부의 경제안보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1. 신정부 경제안보 정책

#### 가. 인식과 기본 방향

□ 신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유럽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열린 협력을 추구하는 것임.

○ 신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1) 신홍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른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대응, (2) 대중국 의존도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으로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외교 전략 강화, (3) 핵심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의 전개, (4) 쿼드 차원의 협력에 대한 사전 조치성격의 소다자 및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RCEP과 CPTPP 등 메가FTA의 전략적 활용, (6) 경제외교의 국내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신홍안보위원회(ESC) 설치 등으로 요약됨.

□ 신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팬데믹,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신홍안보 위협이 빠르게 증대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등 기술 및 제조 능력을 보유한 산업을 경제안보

연계의 넥서스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대외 관계 조절의 지렛대로 이용하며, 대중국 의존도라는 구조적 문제를 수세적으로 보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같은 대안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과 이슈 간 연계를 고려한 포괄적 대응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강조는 경제외교의 확장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나. 변화의 전망

- 신정부는 경제안보 외교의 추진을 명시하고, 국내의 제도적 기반으로 신신흥안보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외교의 질적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공급망의 교란에 대비한 복원력 강화와 다변화, 기술 주권 확보 차원에서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한 무역과 투자의 연계, 데이터 안보의 강화를 위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 첨단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등이 신정부 경제안보 외교의 주 내용임.

- 기술 경쟁 시대에 대한 신정부의 대응 전략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술 경쟁이 격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보유한 자산, 첨단 핵심 기술을 경제안보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쿼드 협력을 위한 고리로 활용하려는 신정부의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술주권의 확보와 강화는 매우 중요함.
- 특히 기술주권을 대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뿐 아니라, 대외 관계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신정부의 구상은 기술 경쟁 시대에 대한 능동적 대응임.

## 다. 보완의 방향: 중층적 연계와 구조적 접근

- 신외교안보정책의 기초 면에서 한미 동맹-열린 협력-미국, 유럽, 일본과의 협력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확보해야 함.
  - 현재의 구상은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은 신뢰 회복과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협력 분야의 확장, 열린 협력은 쿼드 차원의 기능적 협력, 일본과는 소통채널 복원, 유럽과는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등 세 가지 협력을 평면적으로 연계하는 경향이 있음.
  - 세 가지 협력을 단순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연계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요구됨.
- 대중국 경제안보외교의 문제임.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취약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체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역내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칫 '탈중국'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음.
- 대중국 의존도의 관리는 대체가 아니라 다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국 경제외교의 기본 방향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함.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임.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이슈 연계, 순차적 연계, 장의 연계 등에 기반한 복합 전략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 경제안보전략의 기본 방향

### 가. 전략적 자율성: 포용적 경제 주권의 추구

- 신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에 대처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방성에 기초한 세계화의 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임.

○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와 개방성의 유지는 어쩌면 조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형용모순일 수 있음.

○ EU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표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경제와 안보를 쌍방향적으로 연계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하는 가운데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 외교를 지향하고,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열린 국익을 실현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주권은 미중 전략 경쟁의 높은 파고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음.

○ 지렛대

○ 개방성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주권의 확보와 개방성에 기반한 협력 사이에 긴장 관계가 아닌 상승작용이 필요함.

## 나. 경제안보 외교: 연계와 조정

□ 전략적 모호성의 대안은 전략적 명료성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쌍방향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유연성임.

○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하는 가운데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외교를 지향하고,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열린 국익을 실현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가 경제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연계와 조정을 위한 전략의 수립임.

○ 기술주권은 미중 전략 경쟁의 높은 파고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음.

○ 개방성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주권의 확보와 개방성에 기반한 협력 사이에 긴장 관계가 아닌 상승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는 경제외교가 요구됨.

## **다. 전략적 재동조화에 기반한 한미 협력**

□ 미국의 단기 목표: 공급망 복원력과 안정성

○ CHIPS Act: 520억 달러 → 민간 부문 8,500억 달러

○ 리쇼어링과 동맹 쇼어링. 국내 수요 충당에 초점. 이를 넘어서는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의존

○ 그러나 동맹 내에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회피 노력; 지정학적 요인; 대만은 중국에 너무 가깝다.

□ 리쇼어링은 국내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한 대중국 의존도의 감소 수단으로 대두되었음.

○ 그러나 리쇼어링으로 미국이 첨단산업의 자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장벽이 아니라, 교량을 구축(build bridges, not walls)’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국제협력이 결여된 리쇼어링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기술 민주주의(tech democracies)와 기술 전제주의(tech autocracies)의 구도를 형성하려는 데서 나타나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협력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성을 완화하고 상대국의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네트워크적 협력을 의미함.

○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압박 하였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압의 범위는 좁히고, 첨단기술과 같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small yard, high fences”를 추구함.

□ 대중 견제 협력?

○ 미국 민간 부문의 움직임을 잘 모니터링해야

○ “Banning key chips”

○ 2021년: 반도체 포함 1,000억 달러 규모 수출 허가

- 화웨이: 113 면허, 610억 달러
- SMIC: 188 면허, 420억 달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30% 증가
- 화웨이, SMIC: 미국의 수출 제한에 대비 선제적으로 수입 확대
- 공급망 교란의 원인 제공: 문제 제기도 해야. 이를 위한 경제안보 외교 필요.
- 애플: 중국 내 생산 유지, 확대. 그러나 다변화

□ 중장기: 핵심 기술 격차 유지 또는 확대

○ 기술 협력으로 가야

□ 민주주의 협력

○ 어떤 협력? 보편적 가치와 원칙. 불확실성 해소 노력. 조기 경보 또는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

○ 국내적 차원의 민관 신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

**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 Pivot to Asia 2.0

○ Pivot 1.0: 미국이 세계 규칙 수립

□ 다자화, 제도화

○ 인도태평양전략의 한계

○ 유연한 접근을 통한 멤버십 확대. 이슈별 참여

○ 그러나 구속력 과제

- 표준 설정에 필수적

□ IPEF는 제도화 수준이 높고 새로운 이슈를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는 FTA 방식보다는 유연한 네트워크적 협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IPEF는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별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 신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과 같은 양자 또는 소다자 차원의 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지역 또는 다자 차원의 표준 설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군사 협력과 경제 협력의 균형

- U.S. “economic leadership”에 필수
  - 중국 영향력이 확대될 RCEP에 대한 대응 수단
  - 인도를 경제적으로 engage하는 데 어려움

□ 디지털 경제 질서의 이념적 기반(ideological foundation)

-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govern할 것인가? 패러다임의 분화
- “Connected Economy” cross-border data flows and data localization.
- 중국은 기존 질서의 허점 이용
-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성찰
- Standards for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CPTPP, USMCA, Korea-Singapore DEPA



## 마. 우호적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울타리 치기’에 대비

- 바이든 행정부가 리쇼어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첨단 기술 분야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울타리 치기’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배타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구분됨.
- “Small yard, high fence”에서 나타나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방위적 견제보다는 네트워크 내의 허브 위치를 활용한 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견제 전략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자국 기업을 우선 육성하던 전통적 산업정책과 달리, 공급망 교란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울타리 치기 전략이 확산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TSMC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신설에 약 5천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 2021년 6월 TSMC는 일본 쓰쿠바에 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70억 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90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이 연구센터에는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일본 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바. 네트워크적 국제협력: 취약성의 완화와 경제적 강압의 양면 효과

□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역시 필수적임.

○ 지구적 도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외교를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경제적 강압의 확산에 대한 대응 역시 우려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사. 제도적 혁신과 국내 기반 강화

□ 경제안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전략과 국내전략의 연계가 중요 함.

○ 국내적 차원의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안보전략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21세기 경제안보외교의 성패는 대외전략과 국내전략 사이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달려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전정부적 접근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하는 민간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의 동시 강화 → 산업적 취약성 보완 → 일자리 창출 → 안보 역량 강화 사이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시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안보 외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안보전략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 요구됨.

- 미국, 일본, 호주 등이 경제-안보 연계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것임.
- 국무총리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경제안보 외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혁신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핵심은 신흥안보위원회가 경제안보 외교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토론자료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1. 두진호 박사 발표 토론자료

####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에 대한 고찰 필요

기존 전쟁원인론,

A.F.K.Organski, Graham Allison 패권전쟁론,

Kenneth Waltz, Joseph Nye, 인간, 국가, 국제체계 3원적 전쟁론

John Mearsheimer, 공격적 현실주의론

Alexandr Dugin의 지정학 → 푸틴의 민족주의, 세계관<sup>1)</sup>

→ 쇼이구 국방상, 게라시모프 참모장, 러시아군 90만 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격적 현실주의 설명력을 높이는 사례

#### 나. 전쟁 경과 특성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NPT에서 핵보유 인정된 핵보유국

우크라이나 병력 19만, 주로 재래식 전력, 핵 미보유, 나토 미가입국

---

1) Steven Erlanger, "The theories of identity driving Putin's war", The NYT (2022.3.18.)

러시아의 초기 전투 실패원인, 우크라이나의 선전 요인 (2.24~3.25)  
2014년 크림미아 반도 병합과 비교할 때 러시아 군사적 실패 요인  
→ 초기 단계 사이버전 위력 미흡, 우크라이나 지휘부 마비 실패  
Su-35 포함 300대 전투기 동원한 공중 폭격(전략폭격) 미흡 →  
제공권 장악 실패,  
제공권 장악 못한 상태에서 기갑부대 진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전쟁지도 효과, → 국제여론전 주도  
미국 및 나토 국가들의 군사력 지원, 재블린, 스팅어,

## 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신 군사기술 효과가 크지 않았음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우크라이나 핵심 시설 파괴 및 방공망  
와해 효과

일부 인정, 우크라이나 S-300 미사일 방어체제 와해  
러시아 사이버 전력 → 우크라이나 지휘통제체제 파괴에는 실패,  
대통령 젤렌스키 → 국방장관 → 참모총장 발레리 자루지니<sup>2)</sup>

오히려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일론 머스크 제공한 스타링크 위성 효과  
→ 최근 미래 전쟁 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군  
사기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2) Andrew E.Kramer, "Unified against a common enemy", The NYT (2022.4.26.)

## 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질서 재편

: 기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교적 합의, 무효화

1994년 부다페스트 Memorandum-우크라이나 핵포기, 러시아가  
주권 인정

2015년 민스크 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  
나 동부 주권 인정

현상변경적 핵보유 강대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얼마나 신뢰성이  
약한가

: 나토 확대 및 강화,

: 미국 주도 경제 및 안보블럭 vs 러시아-중국 연합 대두

## 2. 이승주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자료

### 가. 경제안보의 재정의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중요 부품의 공급 차단, 컴퓨터 칩, 반도체, → 러시아 군수산업에 타격  
전쟁 수행 능력 차질<sup>3)</sup>

중요 전략물자의 평시 및 전시 수급체계, 서플라이 체인의 확보  
중요성

---

3) Ana Swanson, John Ismay and Edward Wong, "West's tech becomes a vulnerability for Russia", The NYT (2022.6.4.)

: 대러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석유의 수출 규제 의존도 높은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차원 에너지 수급의 문제<sup>4)</sup>

정치적 불안정성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서플라이 체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나타난 경제안보 양상들은 한국 신정부 경제 안보 정책 방향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던짐

중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추세-컴퓨터 칩, 반도체 등 대응  
중요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 재편 추세-대응 필요

##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편되는 국제전략물자 서플라이 체인,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중 무역의존도 → 무역 다변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레짐, IPEF, CPTPP, RCEP

한국은 RCEP 가입, IPEF에의 참가 표명, 다만 CPTPP에의 참가 전망?

## 다. 기존 북방정책 관련 사업들 재검토

기존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던 천연가스 도입, 북극해 항로 개발,

철도 연결 사업, 신북방정책 등의 재검토 모색 필요

---

4)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의존도, 러시아 46%, 노르웨이 20%, 알제리 11%, 미국 6%.



## 우크라이나 전쟁: 신안보적 함의와 고려사항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1. 안보개념의 확대: 신안보 이슈의 대두

-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탈냉전시대의 도래, 국제질서와 안보분야에서도 개념과 인식 측면에서 광범위한 변화
  - 동·서 두 블록으로 나뉘어졌던 세계가 하나로 재편, 국가 간 의존도 급격히 증대, 안보 분야에서도 종래의 군사적 경쟁·갈등을 뛰어넘는 글로벌 이슈들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
-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1994년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필요성 부각
  - 인간 개개인의 소외나 빈부격차, 그리고 각종 차별의 철폐까지를 국가안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 안보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군사충돌·국지전·전면전 중심의 전통적 안보 과제에 더하여 기후변화·자원제약(에너지)·감염병 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 및 테러·마약·불법이민·대량 난민·국제범죄·해적 등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 이러한 이슈들이 새로운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대두된 것은, 환경오염과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인적·물적 이동의 폭발적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 글로벌 신안보 이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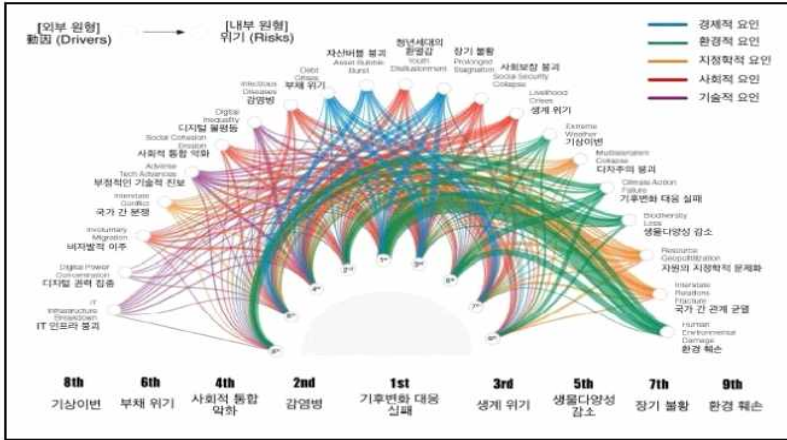
○ 초국경성: 국가이익 충돌, 국제적 협력 필요

○ 잠재성: 평소에는 무관심권, 자원 배분에 한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

○ 불가측성: 시스템에 의한 대응 필요, 거버넌스 차원의 종합적 대응

○ 이슈간 연계성 : 다른 이슈들과 연계, 피해의 규모와 범위 확대

## 〈 범지구적 위기의 상호 연계성 〉<sup>1)</sup>



### □ 신안보 이슈 대두와 관련한 기대와 믿음

○ 전통안보(상호 적대) 개념과 달리 ‘공동의 위협’에 대응(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의 보편성), 국가 간 경쟁보다는 협력의 동기 강화 기대,

- 국가간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강화로 양자-다자간 갈등보다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더 중요

○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역할 기대, 위협의 발현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 정부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에 한계

1) 자료: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p. 13., 최현정, “기후변화와 COVID-19 팬데믹 위기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1.10.19.

- 하지만, 신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한계를 드러냄
  - 신안보 이슈 대응의 중요성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
  - 그러나 국익 차원의 정책 판단, 국가 간 전략적 경쟁과 이로 인한 견제 심리 등이 변수로 작용, 선별적 협력으로 인한 부조화
- 즉, 신안보적 이슈는 전통안보적 문제(전략적 이해관계)와 상호적 관계 속에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

## 2.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안보

-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안보 문제 부각
  - 코로나19 사태: 신안보 의미, 중요성, 협력 필요성, 현실적 한계
  -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안보의 중요성, 전통안보와 신안보의 연계성
- 전통안보적 전쟁이 유발하는 신안보 위기
  - 경제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에 ‘안보’적 개념이 유입·부각됨으로써 자유시장질서 위축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 트럼프 행정부 계기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자유시장경제 질서 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과 패권 경쟁적 차원의 무역 통상으로 이동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실화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통상 활동 과정에 '안보' 변수가 더 강하게 개입, 국가 간 안보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상적 통상활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극도로 억제된 형태로 이루어짐

- 러시아가 자원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 수출물량 축소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변동성 증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동력 저하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원유·천연가스·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주요 생산지 → 전 세계 원자재 생산 중 러시아 비중(%): 천연가스(16.6), 원유(11.2), 니켈(9.1), 알루미늄(5.0)

- 전쟁 장기화로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

## ○ 식량문제

- 다보스포럼(5.22-26),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식량 위기' 지목
- 기후변화로 중국·인도 등에서 작황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 발발로 곡물과 유지류 증 식량가격 급등, 심각한 식량안보 문제 유발
-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감소, 운송비 상승, 그리고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가 지속될 경우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문제 촉발 가능성

- FAO, 2022년 4월 기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58.5로 작년 말(133.7)보다 18.5% 상승 → ‘식량 보호주의’ 강화, 5월 현재 26개국이 식품이나 비료에 대해 전면 수출 금지 또는 특별 인허가 절차 신설 등 수출 제한 조치

#### ○ 기후변화 대응 동력 약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프레임 재편에도 영향, EU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과 배출권 거래제도(ETS)적용 등 적극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촉발되자 화석연료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
- EU 석탄화력 발전 : 전쟁 발발 전 전체 발전량의 10% → 전쟁 발발로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문제 대두로 13%까지 확대

#### ○ 감염병 문제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상자 급증과 난민 속출, 원숭이두창 유행, “지구촌 역사상 유례없는 보건 위기에 직면”(WHO 사무총장, 5.22)
- 우크라이나 국민 중 약 36%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추정, 코로나19 확진자 일부는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 → 보건위기 재점화

#### ○ 난민 문제

- 러·우 전쟁 발발로 550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 난민 EU 등으로

유입, 주거와 식량 등 첫 1년 동안에만 300억 달러(약 37조 원) 비용 추정

- 코로나19 경제적 타격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 경제에 타격,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악영향 및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

#### ○ 테러문제

- 중동 및 아프리카에 투입된 러시아의 대테러 자원이 러·우 전쟁(전쟁)으로 이동, 해당 지역의 대테러역량 위축
- 특히 최근 국제 테러단체의 핵심 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테러단체 세력 확대 계기로 작용 소지

#### □ 시사점: 전통안보 vs 신안보 이슈의 연계성 강화

##### ○ 전통안보 → 신안보 이슈 영향 측면

- 군사적 충돌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식량과 에너지, 보건(전염병) 등 신안보 이슈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급속한 지구화 진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파급영향은 급속도로 심화·확대
- 전쟁발발 시 '피해규모 총량' 개념으로 접근
- 신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동시 병행 추진

##### ○ 신안보 이슈 → 전통안보 영향 측면

-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무기화 현상 심화 → 대 러시아 제재의

한계, 전쟁 초기 종식에 걸림돌로 작용

\* 유럽은 러시아 가스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시장, 러시아는 유럽연합 가스 수요의 40% 이상을 공급, 국제사회 대러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들은 대러 에너지 제재에 부정적 입장
- 신안보 문제 관련 글로벌 협력 강화(시스템, 규범) → 신안보 이슈의 부(負)의 승수효과 최소화, 정(正)의 승수효과 극대화 지향

#### ○ 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접근

- 경제안보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국제 협력 필요
- 경제를 지나치게 안보적 문제로 접근할 경우(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 사회 통제), 자유의 가치 및 자유시장경제 질서와의 충돌 문제

#### ○ 신안보 정책 관련 고려사항

- 포괄적·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 전통안보와 신안보간, 신안보 이슈 상호간 연계성 고려, 신흥안보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집행력
- 정책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치권·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자원 투입, 예방훈련 등 필수적
- 징후 탐지의 중요성: 위기의 잠재성과 불가측성, 사후 대응과 복원력 강화가 중요, 그러나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고 미리 대



비하는 것이 핵심적 관건,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신안보 위  
기지수’개발

- 남북협력의‘새로운 길’로 의제화 : 전통안보로 막혀있는 남북  
관계 신안보를 통한 돌파구 모색

신안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호응이 관건, 인식 공유의  
과정이 필요(‘비본질적 문제’관점 극복)

- \* 신안보 남북협력의 의미와 필요성: △ 비정치성, 인도적 성격  
△ 다가올 미래의 공동 위협에 함께 대비(상징성) △ 대북제  
재 범주 협력 가능 △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신안보  
관련 북 지도부의 인식 변화 관측.



## 일본의 경제안보정책 - 경제안보추진법안과 반도체 산업 재생을 중심으로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 기시다 총리의 경제안보 중시 정책

2022.1.17.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제208회 국회 시정방침연설

#### (경제안보)

경제안보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待ったなしの課題)이며, 새로운 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공급망 강인화에 대한 지원, 전력, 통신, 금융 등의 기간 인프라의 중요 기기·시스템의 사전 안전성 심사제도, 안전 보장상 예민한 발명의 특허 비공개제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제조공장의 설비 투자나 AI, 양자, 바이오, 생명과학, 광통신, 우주, 해양과 같은 분야에 대한 관민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책정 제언

- 2020년 6월 4일, 자민당 정무조사회에 정무조사회장 직속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 설치: 본부장: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회장, 좌장: 아마리 아키라 의원, 사무국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
- 2020년 12월 4일 전략본부, “경제정보능력의 강화(経済インテリジェンス能力の強化)”제언: 정보공동체의 능력 및 연계 강화, 국가안보국(경제반 등)의 체제 및 연계 강화(경제정책의 적절한 정책조정, 통일된 정부 대응의 사령탑 역할, 경제안보분야에서 府省廳과 정보공동체 간의 허브 기능), 민간기업의 경제정보 기능 강화
  - 2020년 4월 국가안보국에 ‘경제반’ 신설: 6일 발족식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안보의 범위가 경제나 기술 분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 세계의 사람, 물건, 돈, 정보의 이동에 대해서 안보 관점에서 적절하게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안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 국가안보국에 경제반이 신설되면서 외무성 조직 개편: 2020년 8월 종합외교정책국 내의 ‘신안전보장과제정책실’이 ‘경제안전보장정책실’로 개편.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고 경제국 소속 국제무역과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개편해 과로 승격시키고 인원 확충.
- 2020년 12월 16일 전략본부, “제언 ‘경제안전보장전략’의 책정을 하여(提言「経済安全保障戦略」の策定に向けて)” 발표: ①경제안

보 필요성: 국익 추구를 위해 경제적 수단을 ‘무기’로 사용해 기존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형태로 변경하려는 국가 출현, “국가의 존립, 생존 및 번영을 확보하고, 자유나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나 룰에 바탕을 둔 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국이나 이러한 규범을 옹호하려는 동지국가와 연계해가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전략적 발상이 필요” “세계 각국에서 ‘국가 안보전략’에 경제안보를 자리매김”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국가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전략적으로 확보한다는 문제의식이 비교적 희박하며 그러한 환경정비도 되어 있지 않다”; ②정의와 기본이념: 경제안보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하는 것”이며,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기본이념으로 제시; ③ 2022년 통상(정기) 국회에서 ‘경제안보일괄추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할 것

- ‘전략적 자율성’은 “우리나라의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기반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생활과 정상적인 경제운영이라는 안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략적 불가결성’이란 “국제사회 전체의 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불가결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장기적·지속적인 번영 및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가 갖는 기술상의 강점이나 약점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전략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보전해야 할 전략기반 산업이나 전략적 불가결성을 획득·육성해야 할 산업을 고려하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보전과 육성을 해야 할 분야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술 우월의 확보·유지를 도모해야 할 구체적인

중요기술을 특정해야 한다”<sup>1)</sup>

○ 2021년 5월 27일 전략본부,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중간보고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을 향한 제언 ~(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 中間取りまとめ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1」に向けた提言~)” 발표 : 연내를 목표로 ‘경제안보전략’을 책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차기 ‘국가안보전략’에 포함하도록 요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해상물류, 금융, 의료’ 등 5개 전략기반산업 이외 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략을 검토하면 예산, 인력 및 법 정비 등을 지원해 “경제안보를 발본적으로 강화해갈 것”<sup>2)</sup>

#### □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안 추진 경과

○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2021.10.4.)과 중의원 선거(2021.10.31.) 공약집에서 경제안보 추진을 제시하고 총리를 의장으로 한 ‘경제안보추진회의’를 설치(2021.11.19.)하고 관련 법안 준비를 위해 내각관방 부(副)장관보(補) 아래 ‘경제안보법제준비실’(50명)도 설치함.<sup>3)</sup>

---

1) 전략기반산업이란 “해외와의 무역·투자 등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과 정상적인 경제 운영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하며, 이러한 산업의 취약성을 파악해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강인성을 높여 외부에 대한 의존을 줄여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2) 2021년 10월 12일 자민당은 전략본부를 ‘경제안보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조사회 회장이 본부장에 취임함.

3) 제1차 기시다 내각 출범 시 경제안보담당상이 신설되어 자민당 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중의원 선거 후인 11월 10일 출범한 제2차 기시다 내각에서도 유임되었으며, 경제안보담당상과 내각관방장관이 부의장을, 총리가 지명하는 15명의 국무대신이 위원으로 참여함.

- 경제안보담당상 자문기구로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유식자(전문가)회의(經濟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가 만들어져 2021년 11월 26일, 12월 28일, 2022년 1월 19일에 이어 2월 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제언서 채택 공개
- 2월 25일 ‘경제안보추진법안’ 각의결정
- 3월 23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고 2주 뒤인 4월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된 데 이어 5월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이외에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함.

〈표 1〉 경제안보추진법안의 구성<sup>4)</sup>

| 장(절)                              | 조문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 제2장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 (제6조-제48조) |
| 제1절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 등                 | 제6조-제8조    |
| 제2절 공급확보계획                        | 제9조-제12조   |
| 제3절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법의 특례         | 제13조-제25조  |
| 제4절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 제26조-제28조  |
| 제5절 특정중요물자 등에 관한 시장환경의 정비         | 제29조-제30조  |
| 제6절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에 의한 지원             | 제31조-제41조  |
| 제7절 안정공급확보지원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         | 제42조-제43조  |
| 제8절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       | 제44조-제45조  |
| 제9절 잡칙                            | 제46조-제48조  |
| 제3장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         | 제49조-제59조  |
| 제4장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 제60조-제64조  |
|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 제65조-제85조  |
| 제6장 잡칙                            | 제86조-제91조  |
| 제7장 벌칙                            | 제92조-제99조  |
| 부칙                                | 제1조-제11조   |

○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중요물자의 공급망의 강인화(強靱化),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첨단 중요기술에 관한 관민의 협력, 안보상 예민한 특허의 비공개 등 네 가지 기본방침을 정함.

4) 법안의 정식명칭은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임.



○ 위의 네 개 분야(일본 언론에서 기둥(柱)으로 표현)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경제적 지원(당근)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채찍)하는 양면적 성격. 특히, 기간 인프라 설비의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벌칙 조항도 포함

〈표 2〉 경제안보법안 4개 분야의 골자

|                     |                                                                                                                              |
|---------------------|------------------------------------------------------------------------------------------------------------------------------|
| 공급망 강인화             |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제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 체제 구축하고 금융·재정 지원, 공장 정비나 비축 등 기업에 대한 국가의 조사                                              |
|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14개의 특정 사회기반사업의 중요 설비(기기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서비스 등)가 외국의 방해행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권고·명령 가능 <sup>5)</sup> |
| 첨단 중요기술에 관한 관민의 협력  | 안보상 중요한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관민협의회 설치해 자금지원, 참가자에 비밀 준수 의무                                                       |
| 안보상 예민한 특허의 비공개     | 안보상 예민한 발명의 기술 유출 방지와 발명자의 특허법상의 권리 유지를 위해 특허출원 시의 심사를 통해 출원 내용을 비공개, 외국 출원 제한 <sup>6)</sup>                                 |

- 5) 기간 인프라 가운데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14개 분야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화물자동차수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등임.  
 6) 현재는 출원 특허는 1년 반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출원 내용을 외국 기업이 군사적으로 전용할 우려도 있음.

## □ 향후의 쟁점

- 법안 성립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경제안보담당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경제면에서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딛었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견 가능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갈 것을 의식하면서 조기 시행을 위해 체제면의 정비도 포함해 가속해 가고 싶다”
-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인데, 제도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정령(政令)과 성령(省令) 등의 하위 규범으로 보완할 것임.
-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정중요물자’의 범위가 최대 관심사: 유식자 회의는 반도체, 의약품, 대용량전지, 중요광물(희토류), 수소 등 예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의 중요성 재확인. 어떠한 형태의 위기 발생 시 특정 중요물자의 추가 지정도 가능.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처 다각화 필요하나 범위나 정의가 불명확함(동맹국인 미국과 동지국가)
- 14개 분야의 기간 인프라 사업자가 향후 지정될 것인데, 이들 사업자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전심사 대상이 될 것임.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보상 리스크가 높다가 사전심사에서 평가될 수 있음(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 첨단 중요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향후 ‘특정중요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쟁점이 될 것임. 유식자 회의는 지원 대상 첨단 중요기술로 ‘우주·해양·양자(量子)·AI·바이오 등’을 예시함.
- 시행 시기가 가장 늦은 특허의 비공개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기술 분야가 특허출원 비공개 심사 대상이 될 것인지를 유식자 회의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 및 무기에만 사용되는 단용(single use, 군사용) 기술 가운데 안보상 매우 예민한 발명을 기본으로 선정해야 하며, 소위 양용(dual use) 기술의 경우 대상을 넓게 하면 산업계의 경제활동이나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을 저해해 경제력이나 기술적 우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국비에 의한 위탁사업의 성과인 기술이나 방위 등의 용도로 개발된 기술 혹은 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 지장이 적은 사례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2.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생 모색

자민당 총선 공약집(自民党 政策 BANK, 2021.10.)

### 5.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한다.

- 향후 세계적으로 선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소재·기술 등의 강화에 더해(중략) 특히 디지털 사회를 지탱하는 첨단 반도체의 설계나 제조 기술 개발을 연구개발기금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반도체 산업재생을 목표로 국내에서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의 국내 개발·제조를 목표로 해외기업의 파운드리 유치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에 필적하는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 일본의 중국 의존 탈피와 반도체 산업 재생

-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고서에서 4개 핵심 품목(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취약 요인 제거와 강화 전략 제시<sup>7)</sup>, 국방수권법(NDAA)으로 반도체 산업 진흥, 수출관리 강화, 중국 5개 회사 제품의 정부조달 배제
-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전략물자나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 수출관리법 제정(2020.10.17.)과 시행: 수출관리법은 양용(dual use) 품목, 군용품, 핵 등의 화물, 기술, 서비스 등의 품목(관리규제품목) 수출에 적용. 주로 대량파괴무기(WMD)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화물이나 기술이 규제 대상이지만,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국가의 안전과 이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품목 리스트에 들어있는 기술이나 제품,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도 금지할 수 있음.
- 2020년 12월 중국은 국가안전법(2015년)에 입각,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는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명기한 ‘外商投資安全審查弁法’ 공포(2021.1.18. 시행)
- 경제안보 법안 통해 중요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해 중국 의존 탈피 모색: 중국과의 무역 규모 등 고려하면 경제적 디커플링은 바람직

---

7) The White House,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June 2021.

하지 않음.

- 2021년 중일 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3,914억 4,049만 달러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 2011년(3,784억2,400만 달러) 이후 10년 만에 과거 최고 기록. 수출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2,061억5,300만 달러, 수입은 12.9% 증가한 1,852억2,490만 달러로 208억6,576만 달러의 무역흑자
- 일본의 대중국 수출(홍콩 포함)은 전체 수출의 27.1%로 대미국 수출 18.4%의 약 1.5배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반도체 산업 쇠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국내 제조 회귀에 대한 위기의식, 일본이 강한 제조장치 소재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공동화 우려<sup>8)</sup> 등을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과 해외기업 유치 및 공동연구

○ 2021년 10월 14일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2024년 가동 목표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발표, 일본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sup>9)</sup>

---

8) 塗布 장치(90%), CVD 장치(30%), 에칭 장치(30%), 실리콘웨이퍼(60%), 레지스트(70%).

9)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단행했던 2019년부터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치·재료 생산 기업의 공급처를 일본 국내에 확보 구상을 세웠으며, TSMC의 일본 국내 유치를 추진함.

**보다 강인하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의 실현 (Achieving More Resil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 중요기술의 보호와 육성, 경쟁우위의 지원, 공급망의 강인성 확보를 위해 협력
- 미일 상무·산업파트너십(JUCIP)에서 채택된 ‘반도체협력기본원칙’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설립
-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안이 국회에서 성립된 것에 유의하고, 양 정상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

○ 미일 반도체협력 기본원칙 합의(2022.5.4. 하키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①개방적인 시장(open markets). 투명성, 자유무역, ②미일 및 동지국가·지역(like-minded countries and regions)에서 공급망의 강인성(resiliency) 강화라는 목적 공유, ③서로 수용할 수 있고 보완하는 형태(mutually accepted and complementary manner)

□ 한미, 미일, 일본-대만의 반도체 협력 속에 한일 반도체 협력 가능성은?

○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 결의, 긴급한 과제인 반도체의 국내 제조 기반 진흥을 위해 국내 반도체 공장의 신증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포함해 미국 등 타국에 필적할 규모의 예산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함(2021.5.28.)

○ 2022년 5월 16일자 아사히신문 3면, “반도체 산업 부활 노리는 정부”“삼성 대항해 신공장, 유치전 정부 개입에 우려도”

○ 일본은 미국, 대만, 유럽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나 한국과의 협력에는 부정적

# 半導体産業復活狙う政府

世界で半導体工場を建設するツシムが起きている。各国が競争を脱しながら、日本は税金も投入しかつて隆盛を誇った産業の復活をめざす。半導体不足は深刻で偽造品が国内に出回るといった問題もある。

▼一面参照

96層、112層を中心につくる。建設中の第2製鉄種  
では最先端で高性能の16  
アは、の分野で世界シェア

引き上げ、サムスンなどに  
対抗したいと考えた。

(土庫野郎)

0倍出の予想を用意して、  
人教授「国際政治経済学」

## サムスン対抗へ新工場

岩手・花巻空港から車で約30分、南に進むと巨大な海苔畑が見えてくる。半海苔工場「全クオシアポルディ」の北十町で、第一

る。1台あたり数斗の間ものある海苔産地をえなてはでない。業界に知られ、大量仕入れがめられる。記者を乗せる次の花

「世界でも極度の半導体不足が起きている。半導体の生産を加速させる必要がある。米インテルは今年1月、オハイオ州に最先端の工場を新設すると発表し、当初の投資額は500万ドルと推定されている。」

日本政府は、向ききつう  
月並に300万、約40億  
円だ。日本は1980  
年代には専ら、東三三  
アの50%前後を握って  
いた。いま10%ほど落ち  
た。これは、経済産業省「産業  
構造文庫」第14号、1983  
年12月、伊藤、今案

交際相手の健康状態は、約4  
 平方メートルの2020年に稼  
 働した。  
 大企業レジャーと工  
 業  
 費1億3千万円  
 円  
 規模  
 規模  
 円

今後10年間で最大1千億<sup>ドル</sup>まで増やす。韓国のサムスン電子もテキサス州での工場を増やさない。新たな工場

を起しかねない。  
「要は動きをする半導体があるから調べて欲しい」

月、半導体の真偽を判定するサー  
ビスを始めた。月80〜100件は  
受領があり、4分の1ほどが偽

|   |              |              |
|---|--------------|--------------|
| 定 | 総事業          | 場への隣にあがると、ホコ |
| 秋 | その規模は協立エスエル社 | りなを防ぐクリーノール  |
| 末 | その内、米の約2千坪を府 | がみつた。ガラス船に   |
| 半 | 約2千坪         |              |
| 度 | 2千億円         |              |
| 度 | 1千億円         |              |
| 月 | 約200         |              |
| 月 |              |              |

場建設を表明した。  
台湾固体電路製造(TS  
MC)は米アリゾナ州に  
拠点を構っていた、メーカ

電子機器の受託製造をしている  
古賀電子（神奈川県平塚市）に  
は、顧客が海外の業者から購入し  
て名や型番を書きかえるケース。

|                                               |               |  |
|-----------------------------------------------|---------------|--|
| 見える内部に柱はほとんどない。自動化で従業員の人数を少なく、24時間稼働し、天竺のししが数 | 稼働予定<br>2022年 |  |
| 重慶市市                                          |               |  |
| 手県市                                           | 23年           |  |
| 本県温町                                          | 24年3月         |  |
| 青島市                                           | 23年後          |  |
| 威海市<br>（済南南）                                  | 25年後          |  |
| 川島市                                           | 24年後          |  |
| 島県                                            | 21年11月        |  |

建て。幅が狭いほど性能が高まる回路規模は、最体が国内で出回っている先端の5メートル(ナノ)機構なら組み込まれると

「偽造」という半導体が持ち込まれる」となる。外見は正規品をそっくりだったが、X線と測る内部の配線がほとんど異なる。つまり偽造品はほとんど100%の確率で配線が異なる。外見は本物そっくりのため消されたロゴの痕跡や配線などを正規品と比べないと見抜けないという。

|     |     |
|-----|-----|
| 内容  | 場   |
| 三日月 | 三日月 |
| 岩北  | 岩北  |
| 開業  | 開業  |
| 佐伊  | 佐伊  |
| 伊丹  | 伊丹  |
| 石能  | 石能  |
| 広   | 広   |

米政府も後押しする。半導体分野に520億ドル(約1兆5000億円)を投入する。1995年の半導体市場は1兆5000億円に達する見込みだ。

ていたものがあつたという。古賀徹也が落着くにつれて、正現代店を通さずに調運し、偽真教員は「車や医療機器に使われ

|         |                     |
|---------|---------------------|
| 主要半導体事業 | フタバが搬送車製造装置に移され、加され |
| アイ      | フラッシュメモリ工場増設        |
| （体      | 電機大手グループ部品          |
| 造）      | 自動車部品工場建設           |
| コ       | 半導体材料のシリコン          |
| 国       | エーハーの半導体材料          |
|         | との電力制御工場増設          |
| 機       | 電力制御工場増設            |

6・7兆円を投じて、製造能力を高め研究開発も促す。中国も欧州も数兆円規模の投資を計画している。

き書番

この工場には多くの雇用がある。クリールには厳しい基準がある

■国内の企業

半導体  
クル  
ホル  
ンクス

精製  
回路製  
(TSMC)

SUMCO

JX金

東芝

三菱電

模の工程とする。半導体にあらゆる製品に使われており、各国は工場を国内にも

## 型番

（じ）と頭添ではないが、超ず  
 電機大手OKIの子会社の紳工  
 ニシアリング（東京）は昨年6  
 月撤回する。（小堀盛之

© 朝日新聞社 無断複製転載を禁じます。

〈표 3〉 반도체 관련 일본 국내 투자현황(아사히신문, 2022.5.16.)

| 기업          | 사업내용                               | 장소                      | 가동 예정                  | 총사업비                                              |
|-------------|------------------------------------|-------------------------|------------------------|---------------------------------------------------|
| 키오시아<br>홀딩스 | 플래시 메모리<br>생산 공장 증설                | 미에현<br>옥카이치시(四日<br>市市)  | 2022년<br>가을            | 각각 1조 엔 규모<br>추정, 협업하는<br>미국의<br>웨스턴디지털과<br>공동 부담 |
|             |                                    | 이와테현<br>기타카미시<br>(北上市)  | 2023년                  |                                                   |
| TSMC        | 소니(전기)와<br>텐소(자동차부품)와<br>협업해 공장 건설 | 구마모토현<br>기쿠요마치<br>(菊陽町) | 2024년 말                | 약 1조 엔, 일본<br>정부가 약 4천억<br>엔 제공 예정                |
| SUMCO       | 반도체 기판재료인<br>실리콘웨이퍼<br>공장건설        | 사가현 이마리시<br>(伊万里市)      | 2023년<br>후반            | 약 2천억 엔                                           |
| JX금속        | 반도체 배선재료 등<br>공장 건설                | 이바라키현<br>히다치타나카시        | 2025년                  | 2천억 엔 규모                                          |
| 도시바         | 전력 제어 담당하는<br>파워 반도체 공장<br>증설      | 이시카와현<br>노미시(能美市)       | 2024년                  | 1천억 엔 규모                                          |
| 미쓰비시<br>전기  | 전력 제어 담당하는<br>파워 반도체 공장<br>증설      | 히로시마현<br>후쿠야마시<br>(福山市) | 가동 중<br>(2021년<br>11월) | 약 200억 엔                                          |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초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 '사과'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현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운(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휘(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68 (2021. 1)**

제 목: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영철(서강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前 일본公安조사청 조사2부장)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히라이 히사시(교도 통신 객원논설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한동대 교수)

안경모(국방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승실대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한양대 교수)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우(일본 테이쿄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69 (2022. 1)**

제 목: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 통신 객원논설위원)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북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70 (2022. 6)

제 목: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용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회원가입 안내

### ■ 회 비

#### ● 1년 회비

일반회원 : 50,000원, 학생회원 : 3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재 가 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 300만원 이상

#### ● 납부방법 :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 『동북아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우)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박현정

전화 : 02-3700-0725, 팩스 : 02-3700-0722

E-mail: [pedia@kyungnam.ac.kr](mailto:pedia@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신청일 20    년    월    일

|                   |                                                                                                                                                                                                                                                                                                                    |                   |                |
|-------------------|--------------------------------------------------------------------------------------------------------------------------------------------------------------------------------------------------------------------------------------------------------------------------------------------------------------------|-------------------|----------------|
| 분 류               |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 <input type="checkbox"/>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개인평생회원 <input type="checkbox"/> 기관평생회원                                                                                                                                                          |                   |                |
| 성명(기관명)           |                                                                                                                                                                                                                                                                                                                    | 생년월일<br>(사업자등록번호) | .   .   .      |
| 자택주소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전화:(    )    -    |                |
|                   |                                                                                                                                                                                                                                                                                                                    | 휴대폰 :             |                |
|                   |                                                                                                                                                                                                                                                                                                                    | E-mail :          |                |
| 직장(학교)<br>주소 및 직위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직위 :              | 전화:(    )    - |
| 우편물발송             | <input type="checkbox"/> 직장(학교) <input type="checkbox"/> 자택                                                                                                                                                                                                                                                        |                   |                |
| 학력사항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대학교<br/>대학교         </div> <div>           과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br/>           과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학위 (    연도)         </div> </div> |                   |                |
| 전공 및<br>관심 분야     |                                                                                                                                                                                                                                                                                                                    |                   |                |
| 국내외<br>학회활동       |                                                                                                                                                                                                                                                                                                                    |                   |                |
| 주요저서<br>및 논문      |                                                                                                                                                                                                                                                                                                                    |                   |                |
| 주요 경력             |                                                                                                                                                                                                                                                                                                                    |                   |                |
| 가입권유인             |                                                                                                                                                                                                                                                                                                                    |                   |                |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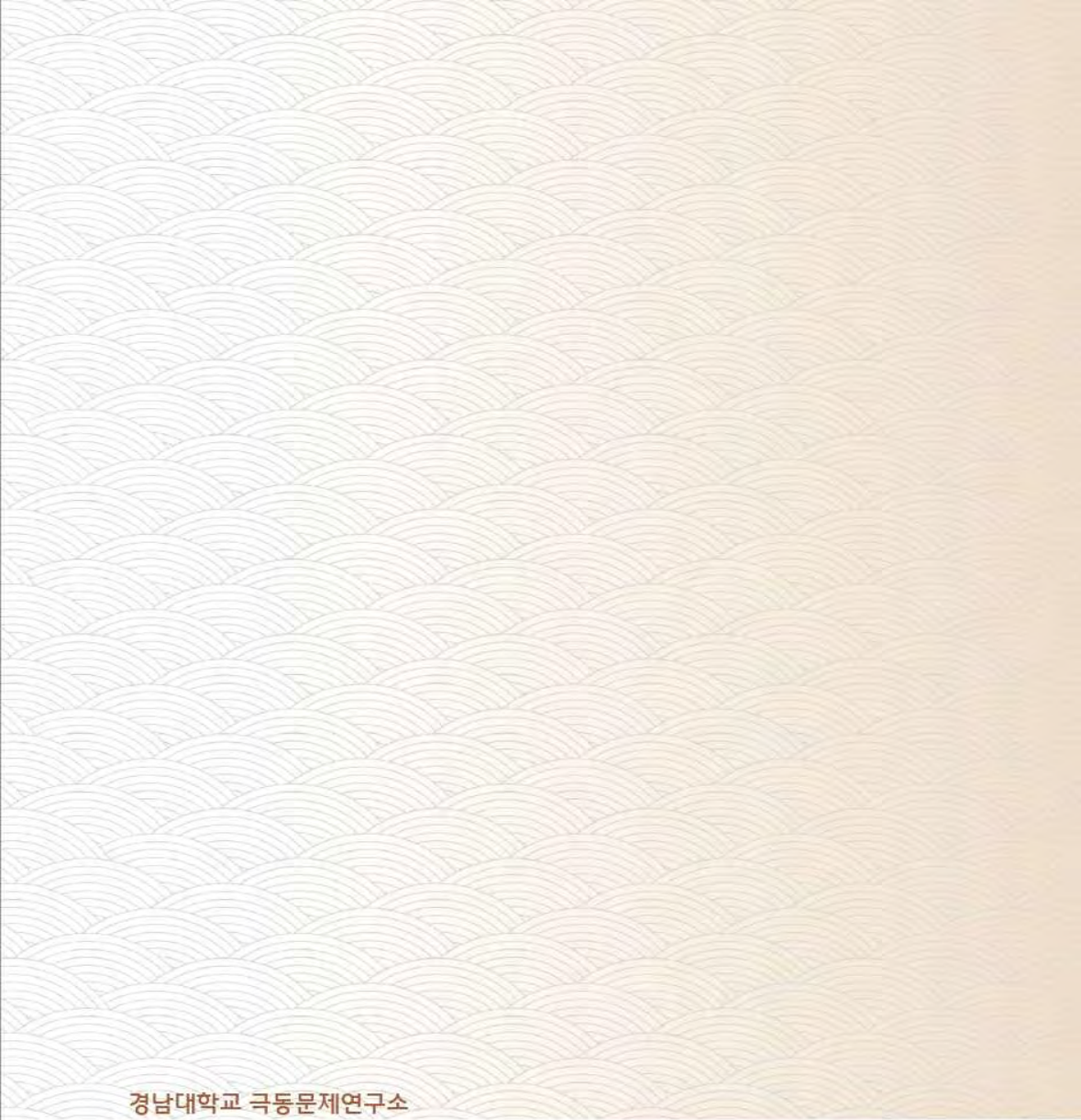
-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_\_\_\_\_ ( 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el: 02-3700-0700 / ifes@kyungnam.ac.kr